전북다문화포럼 창립 및 기념 포럼

- 다문화 담론과 교육 -

■ 일 시 : 2010년 3월 29일(월) 14:00

■ 장 소 : 전북도청 **종합상황실**

■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포럼을 창립하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신기덕 전북발전연구원장님과 허명숙 여성정책연구소장님, 그리고 포럼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이 12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다민족·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 도 역시 급속한 세계화 흐름 속에 다문화가족이 약 6천 5백 세대에 이르고 있고 바야흐로 외국인 2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갈등, 가족 갈등, 2세 양육문제, 경제적 곤란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사회적,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전북발전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민·관·학이 함께하는 **전북 다문화포럼**을 출범시키고 기념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문화 관련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북 다문화포럼」을 통해 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다문화 정책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삶을 개척하러 온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 그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선국자적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럼을 통해 논의된 결과는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가고 정부차원의 대안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오니 포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시군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북 다문화포럼」이 열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29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 경 옥**

목 차 Contents

1 전북다문화포럼 개최 개요

2 전북다문화포럼 운영 방안

3 제1차 전북다문화포럼

□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전라북도) ····· 11

□ 주제발표 1 ····· 23

다문화 담론 - 설동훈(전북대 교수)

□ 주제발표 2 ····· 49

다문화사회 현실과 교육 - 박천응(안산이주민센터 소장)

※ 전북 다문화포럼 위원 명단 ····· 65

전북다문화포럼 개최 개요

□ 목 적

○ 다문화 지원 관련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진 사례 및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 개최개요

○ 일시/장소 : 2010. 3. 29(월) 14:00~16:00/도청 4층 종합상황실
○ 주 요 내 용 : 다문화포럼 창립(분과조직 등) 및 1차 포럼
  – 제 1주제 : 다문화 담론(전북대, 설동훈 교수)
  – 제 2주제 : 다문화사회 현실과 교육(안산이주민센터, 박천웅 소장)
○ 참여대상 : 90여명 정도
  – 포럼위원 40, 시군 담당 및 담당자 28, 센터 사업담당 및 운영담당 28
○ 주　　관 :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창 립 식〉	14:00~14:10 (10′)	·포럼위원 소개 및 인사	사회 : 전발연
	14:10~14:15 (5′)	·다문화 정책 설명(ppt)	도 다문화지원담당
	14:15~14:30 (15′)	·포럼 운영방안 협의	사회 : 전발연
〈1차 포럼〉	14:30~14:32 (2′)	·국기에 대한 경례	
	14:32~14:35 (3′)	·인사말씀	포럼대표
	14:35~14:38 (3′)	·축　　사	행정부지사
	14:38~15:30 (52′)	·주제발표	설동훈, 박천웅
	15:30~16:00 (30′)	·자유토론(포럼위원)	주재 : 포럼대표

전북다문화포럼 운영 방안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제결혼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경제·사회적 부담, 국가 경쟁력 약화(위기)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자원 육성(기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

○ 다문화 지원 정책의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사례 및 타 지역에서의 정책을 벤치마킹·공유함으로써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

Ⅱ. 사업개요

○ 사업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사업기간 : 2010. 3 ~ 2010. 12

○ 주요내용

– 다문화 정책에 관심 있는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와 함께 정기 포럼 운영

– 다문화 관련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논의

– 다문화 포럼 4개 분과(사회, 복지, 교육, 문화) 활동 지원

Ⅲ. 운영방안 및 추진체계

운영방향

○ 다문화 업무에 관심이 있는 교수, 전·현직 공직자 및 시군 공무원, 현장 활동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지원센터 종사자, 민간단체 현장 활동가 등)와 함께 열린 포럼 방식으로 운영(회비는 무료로 하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움)

- 다문화 지원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 자문그룹 역할
- 다문화 지원정책의 이론적 근거 확보를 위한 학제간 연구모임
- 다문화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 담당

⇒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논의 기구

포럼운영 개요

1) 조직구성

○ 포럼 대표 : 포럼대표 1명

○ 운영 위원 : 15명 내외 (포럼 대표 1, 당연직 6, 분과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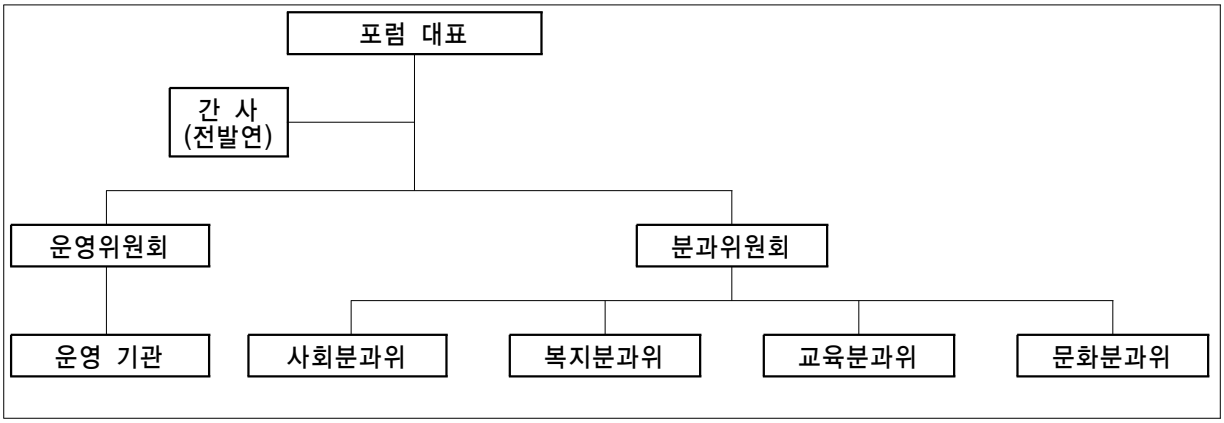
- 당연직은 예산지원 기관(道) 및 운영기관(전발연)의 직위자로 선정
- 도 본청 : 3명 정도(국장, 과장, 담당)·전발연 : 3명 정도(소장, 간사, 실무)
- 위촉직은 4개 분과에서 분과별 2명씩 선출(분과위원장, 간사)하여 참여

○ 분과 운영 : 4개 분과로 운영

○ 분과 활동 : 임원(분과위원장, 간사) 선임, 자율적으로 진행

- 사회 분과 : 다문화 인식개선, 사회통합대책, 삶의 질 향상, 인권보호 등
- 복지 분과 :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의료·취업지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 교육 분과 : 이주여성 출생자녀에 대한 보육 및 아동교육·학교교육 등
- 문화 분과 : 한국문화 및 이국문화, 자조모임, 자원봉사활동, 각종 행사지원 등

※ 참고 : 전북 다문화포럼 기구(안)



2) 운영방법

○ 정기 포럼 : 연 4회 정도

- 참석대상 : 포럼회원, 관계 공무원, 현장 활동가 등
- 진행방법 : 포럼 대표 주재, 다문화 전문가 발제 및 토론
- 결과활용 : 다문화정책에 반영 및 관련 중앙부처 건의

* 2010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예정인 「2010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대회」시 다문화정책에 대한 학술 지원

○ 운영 회의 : 정기포럼 개최 前 또는 필요시(포럼 대표가 주재)

- 참석 대상 : 포럼대표, 운영위원
- 심의 대상 : 포럼재원 배분, 분과위원회 지원, 안건심의 채택(건의)
- 의결 방법 :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결의로 결정

○ 분과 활동 : 월/분기별 개최(분과회원들이 협의하여 추진)

- 참석 대상 : 분과위원회 회원
- 포럼 진행 :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 '집담회' 방식으로 운영

*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표

3) 운영기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4) 포럼 회원 구성 및 운영

○ 포럼 설립 취지에 찬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회 방식으로 가입

- 전문가: 다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교수(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 공직자: 다문화 지원관련 전·현직 공직자 및 시군 공무원 등
- 현장 활동가: 다문화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다문화지원관련 민간단체의 대표자 및 산하 종사원 등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전라북도)

다민족 다문화와 하나되는 건강한 사회

2010년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전라북도

보고 순서

I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II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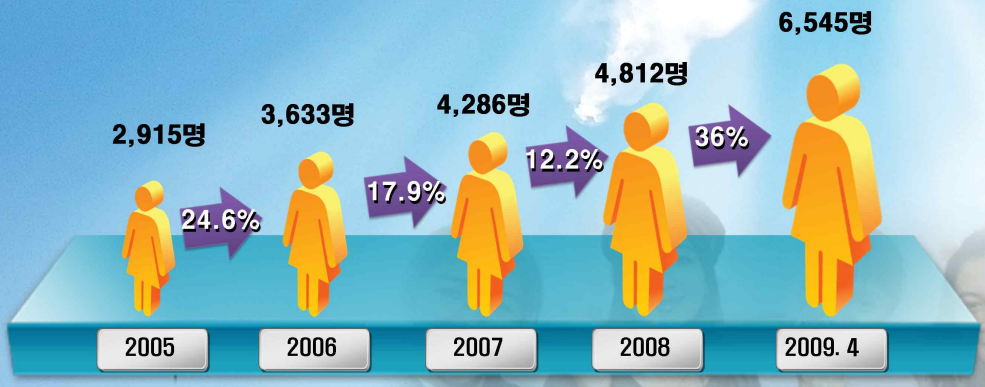
III 추진목표와 체계

IV 중점 추진내용

V 마 무 리

Ⅰ.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1. 전북 이주여성 : 6,545명



- ❖ 전북 거주 외국인은 21,749명으로 전북 인구대비 1.5%를 차지
- ❖ 이주여성은 6,545명으로 전국(149,853명) 대비 4.4% 수준
- ❖ 지난 5년간 매년 약 20% 이상 증가 추세
- ❖ 시부 4,516명(69%), 군부 2,029명(31%)로 도시집중 현상 발생

Ⅰ.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2. 국적별 분포



- ❖ 국적은 취득 1,578명(24.1%), 미취득 4,967명(75.9%)으로 한국 입국후 2년 경과후 국적취득 자격이 있으며 4년 정도 소요
  - 중국(한족 1,831명, 조선족 1,314명)으로 약 48.2%를 차지하나, 조선족은 의사소통 가능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활
  - 한국인 배우자는 베트남 출신 등을 선호하나, 베트남 정부의 규제가 강화됨

Ⅰ. 전북 다문화가족 현황

3. 다문화가족 자녀 : 5,474명



❖ 다문화가족 자녀는 5,474명으로
- 외국인 양부모 31명, 외국인 한국인 부모 4,831명, 한국인 부모 612명

❖ 6세 이하가 61.5%, 7~12세는 27%로 영.유아가 대다수 차지함에 따라 1~2년 이내에 취학자녀는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

Ⅱ. 지원의 필요성

국제결혼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있는 상황

경제.사회적 부담, 국가 경쟁력 약화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자원 육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

국내 요인	• 저출산 고령화, 농촌 도시 인구이동, 여성 독신자 비율 증가 • 이윤추구 국제결혼 중개업자 등장
국제 요인	•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동남아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류 영향 • 상업적 국제결혼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국가 이미지 실추

Ⅱ. 지원의 필요성

지역사회 정착 애로사항



Ⅱ. 지원의 필요성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자원

민간 외교사절
- 모국의 가족·친지와 교류
- 한국문화·제품 우수성 홍보

농어촌 활력 증진
- 이농과 저출산에 따른 공동화 문제 해소 기여
-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 후계 농업인력 양성



다문화 사회 정착 기회
- 문화적 다양성은 귀중한 자산
- 다문화는 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근원

글로벌 마인드 제고
- 도민의 국제화 역량 함양
- 국제화 학습기회 제공

Ⅲ. 추진목표와 체계

비 전 다민족 . 다문화와 하나되는 건강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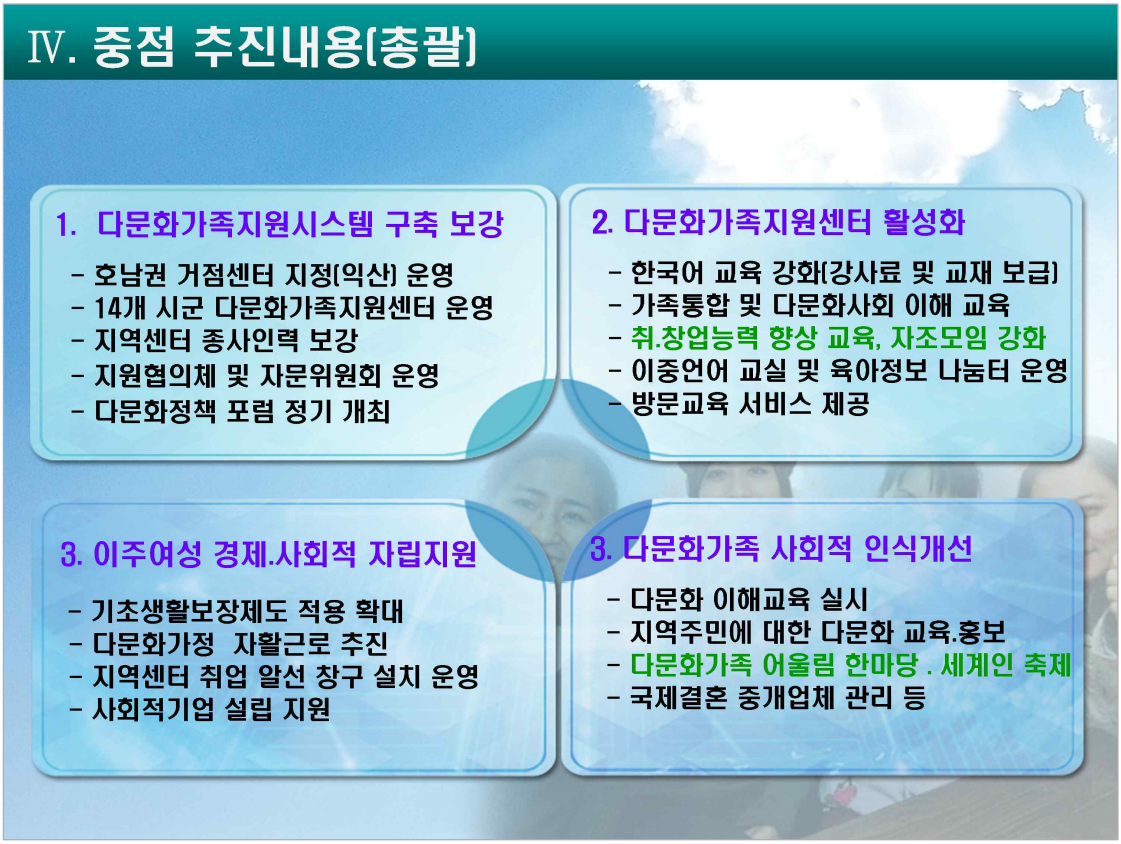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서비스 전달 중추기관으로 육성
- 결혼이민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생애 주기별(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등)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범 도민 사회적 인식개선

- 사회단체·행정·학계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 필요
  - 교육, 문화적응, 의료지원, 인권보호 -

Ⅲ. 추진목표와 체계



- 이주여성 쉼터(2개소), 긴급지원센터(1577-1366), 민간사회단체
-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 대학, 교육청, 경찰청, 노동청, 출입국 관리사무소, 체신청 등


Ⅳ. 중점 추진내용(총괄)
1.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 구축 보강
- 호남권 거점센터 지정(익산) 운영
-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지역센터 종사인력 보강
- 지원협의체 및 자문위원회 운영
- 다문화정책 포럼 정기 개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 한국어 교육 강화(강사료 및 교재 보급)
-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 자조모임 강화
- 이중언어 교실 및 육아정보 나눔터 운영
-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3. 이주여성 경제.사회적 자립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확대
- 다문화가정 자활근로 추진
- 지역센터 취업 알선 창구 설치 운영
-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3. 다문화가족 사회적 인식개선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홍보
-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 세계인 축제
-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등


Ⅳ. 중점 추진내용
1.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 구축 보강
1-1. 호남권 다문화 가족 거점센터(익산) 운영
익산시 거점센터
한글 및 방문지도사 양성.보수교육
신규 지역센터 사업.운영요령 교육
지역센터 우수사례 개발 보급
지역센터 및 민간단체 협력체제 구축
전북 14
전남 16,
광주 2

Ⅳ. 중점 추진내용

1.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 구축 보강

지역센터 인력 보강
- 가족상담인력(10명)
- 종사자(4명)

지원협의체 운영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협의체
  - 30명, 연4회 개최
  - 유관기관간 협의 및 정책 결정 기능
-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 15명(당연직 6, 위촉직9)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다문화 정책 포럼 정기 개최(연 4회)
- 4개 분과 구성 운영
  - 사회, 문화, 복지, 교육
-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방안 공론화

전국 최초 지방비 지원쉼터 운영
- (2개소(전주, 익산)/ 전주는 전액 지방비
- 가정폭력 피해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아동 보호(의료, 법률, 출국 지원)

Ⅳ. 중점 추진내용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전국 최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 시군 설치
- ('07년) 3개소 → ('08년) 7개소 → ('09년) 14개 전 시군
- 재정지원 : 980백만원(센터당 70백만원)



센터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가족교육 · 상담
- 취 · 창업 지원
- 다문화인식개선 등

Ⅳ. 중점 추진내용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입국초기 생활정보 제공



- 방문 상담 (이주여성·남편·시부모)
- 필요한 정보 제공 (생활안내서, 한국어교재)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이용 안내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 개인별 수준별 지원(초급, 중급, 고급과정)
  - 한국어 교재 무료 제공 : 1,800권(센터 14, 쉼터 2)
- 다문화이해교육 : 한국사회적응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등
- 가족교육.상담 : 가족 통합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 개인상담
- 취 · 창업지원 교육 : 원어민 강사, 정보화 교육

특화사업

- 통 · 번역서비스 자조모임 운영 : 통역지원, 멘토 역할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 음식체험, 의상체험, 전통공연 등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공동사업추진, 서비스 연계 등

Ⅳ. 중점 추진내용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방문교육 서비스

- 대 상 : 방문지도사 392명이 1,600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전체 다문화가정의 25%에 방문서비스 제공
- 사업비 : 1,803백만원

한국어교육



방문지도사 → 806가정

아동양육 지원



방문지도사 → 794가정



Ⅳ. 중점 추진내용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국제결혼 예비남편 사전 교육

- 센터 집합교육 또는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사전 적응교육 실시

시 · 군

- 국제결혼 예비남편

명단 통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예비남편 사전교육
- 다문화 교육
- 기초 외국어회화 교육

Ⅳ. 중점 추진내용

3. 이주여성 경제 . 사회적 자립지원

결혼이주여성 통역요원 활동 지원

- 결혼이주여성을 전문통역요원으로 활용 지원
  - 70명(센터당 5명) / 56백만원
  - 추진기간 : '10. 2 ~ 12월
  - 5개국 :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

취.창업 지원

- 지역센터 취업 알선 창구 설치 운영
-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 결혼이민자를 고용하여 특화된 사업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통역, 농산물 제조.판매, 공예품 제작.판매, 학습도우미 등

Ⅳ. 중점 추진내용

4. 다문화 사회적 인식 개선

다문화 교육.홍보

-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이해과정'을 공무원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
  - 교육기간 : 3박 4일
- **지역주민에 대한 다문화 교육.홍보**
  -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세계인 축제 등 화합의 장 마련
  - 지역행사, 문화강좌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 및 홍보물 상영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

-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
  - 추진내용 : 다문화지원 학술대회, 우수사례 발표, 지원단체간 정보 교류
  - 참여기간 : 대학, 지자체, 지역센터, 민간단체 등
- **국제결혼 중개업체 지도 관리**(노인정책과)
  - 인권보호, 소비자 보호, 상당 실무 교육 및 허위.과장 광고 단속 금지 등



제1주제 – 다문화 담론

설 동 훈 (전북대 교수)

한국 사회 다문화 담론과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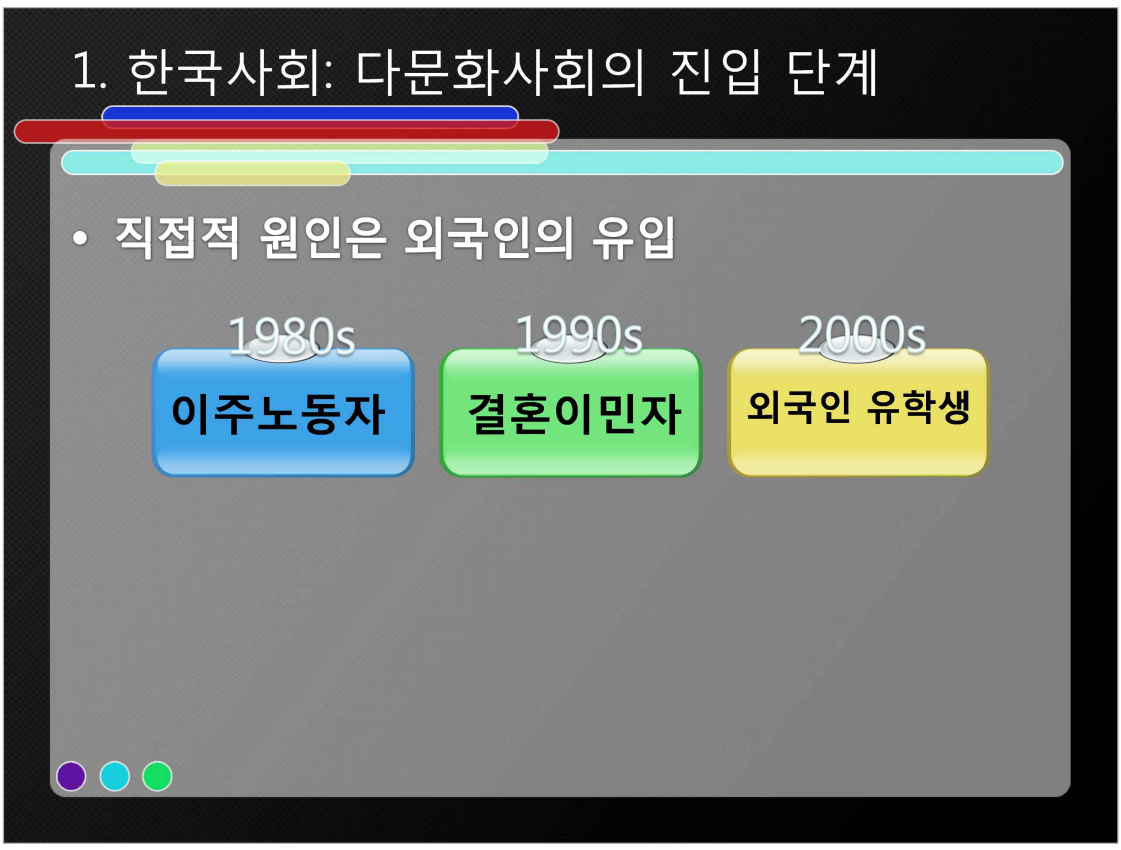
설동훈(전북대 교수, 사회학)

1. 한국사회: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



CIA, *The World Factbook* (2009)

한국은 지구상에서 매우 드문, 동질적 종족집단(ethnic groups)



1. 한국사회: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

- ‘외국인 • 귀화자 및 그 자녀’ 수가 2009년에 100만 명

국내 ‘외국인 주민’ 수만 106만 명

한국의 총인구 4851만 명의 2.5%

1. 한국사회: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

- 그렇지만 정착이민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여전히 한국은 ‘외국인 인구 비율’ 또는 ‘출생지가 다른 나라인 인구 비율’ 면에서 세계 최저 수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하면,
2009년 한국사회의 소수종족 인구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

동화가 쉬움

동화가 어려움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발전국가의 공업화·세계화 전략의 연장선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 지구상에서 가장 동질적인 나라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담론이 유행 중
1990s
학계와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거론
2006
정부 정책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도입
2008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로 채택됨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 **지구상에서 가장 동질적인 나라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담론이 유행 중**

◎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설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 여러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

한국연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국내외 학자들에게 다문화사회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 언론에서도 다문화사회 특집 기사를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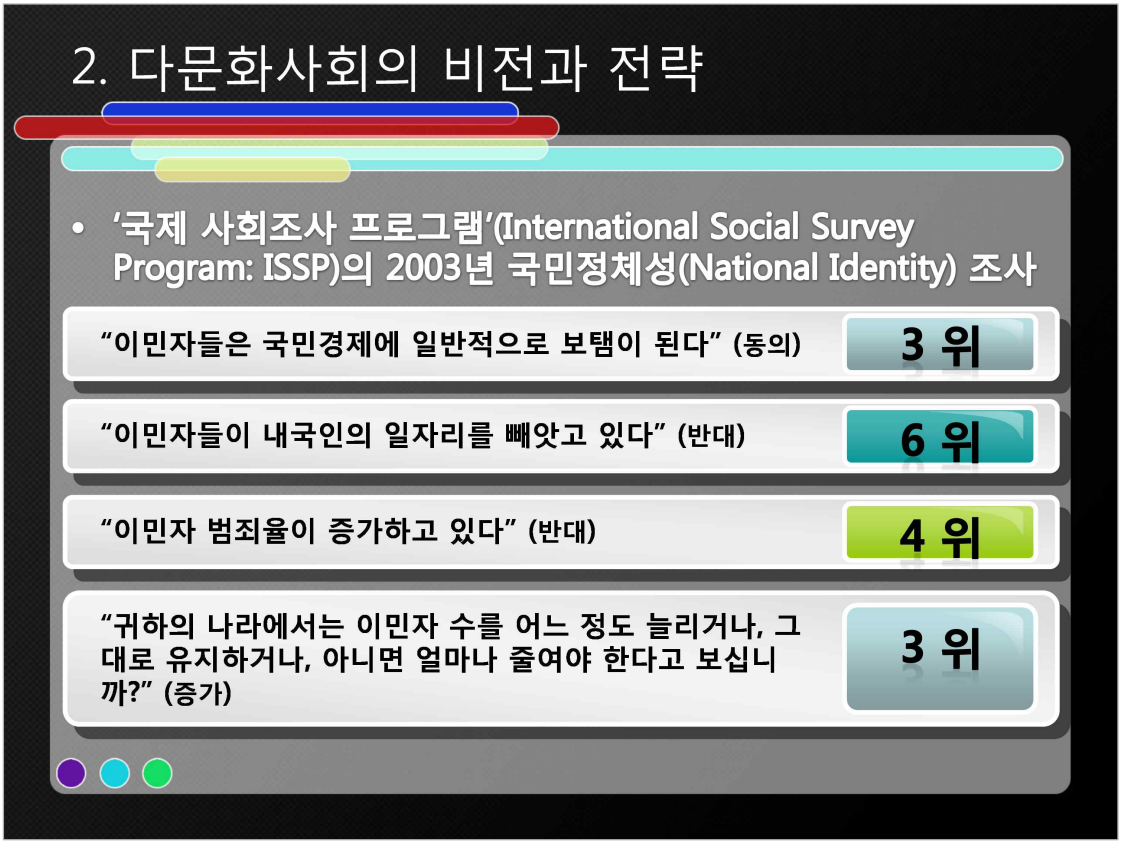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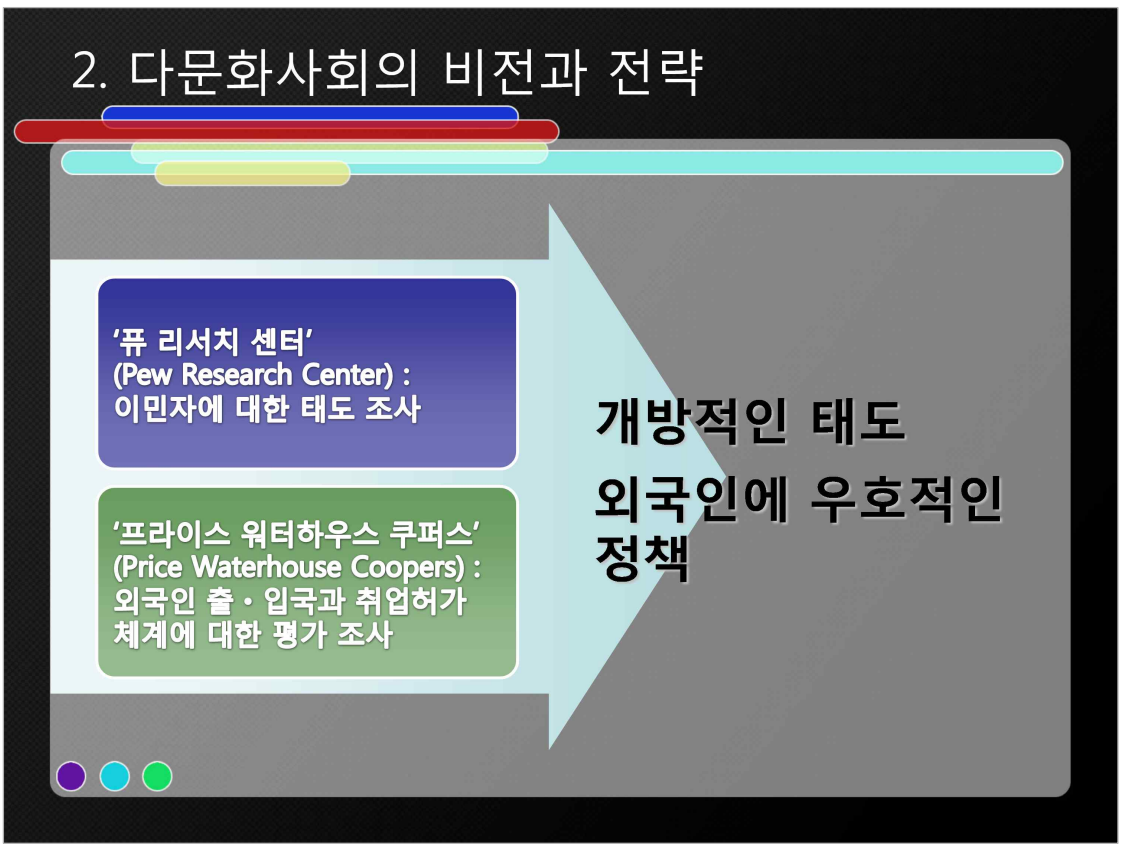
- **다문화는 과거 개발연대의 근대화・공업화・정보화・세계화에 뒤이어, 한국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

· 발전국가의 경제발전지상주의 사고방식

· 외국인의 수용을 선진화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

· 선진화를 추구하는 데 이견이 없는 한국인들은 다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의 2003년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 조사
"이민자들은 국민경제에 일반적으로 보탬이 된다" (동의)
3 위
"이민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반대)
6 위
"이민자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
4 위
"귀하의 나라에서는 이민자 수를 어느 정도 늘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증가)
3 위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퓨 리서치 센터'
(Pew Research Center) :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rice Waterhouse Coopers) :
외국인 출·입국과 취업허가 체계에 대한 평가 조사
개방적인 태도
외국인에 우호적인 정책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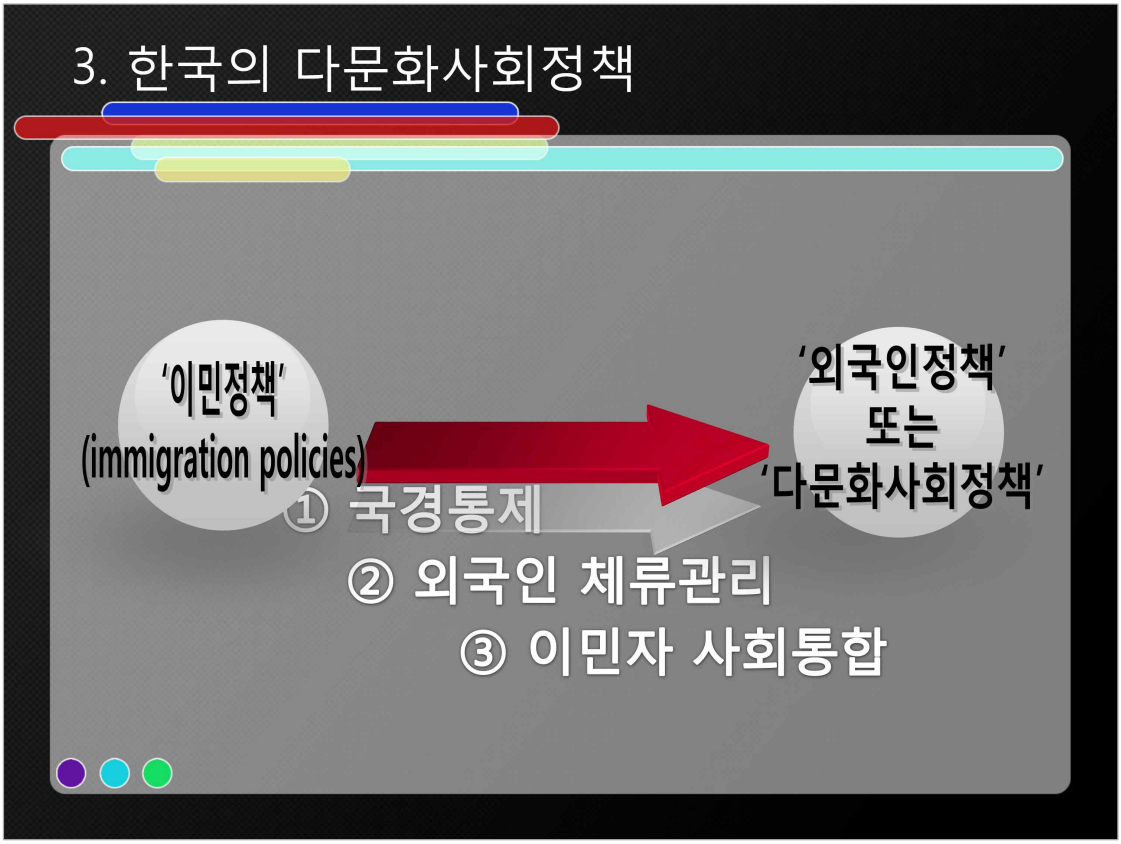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다문화사회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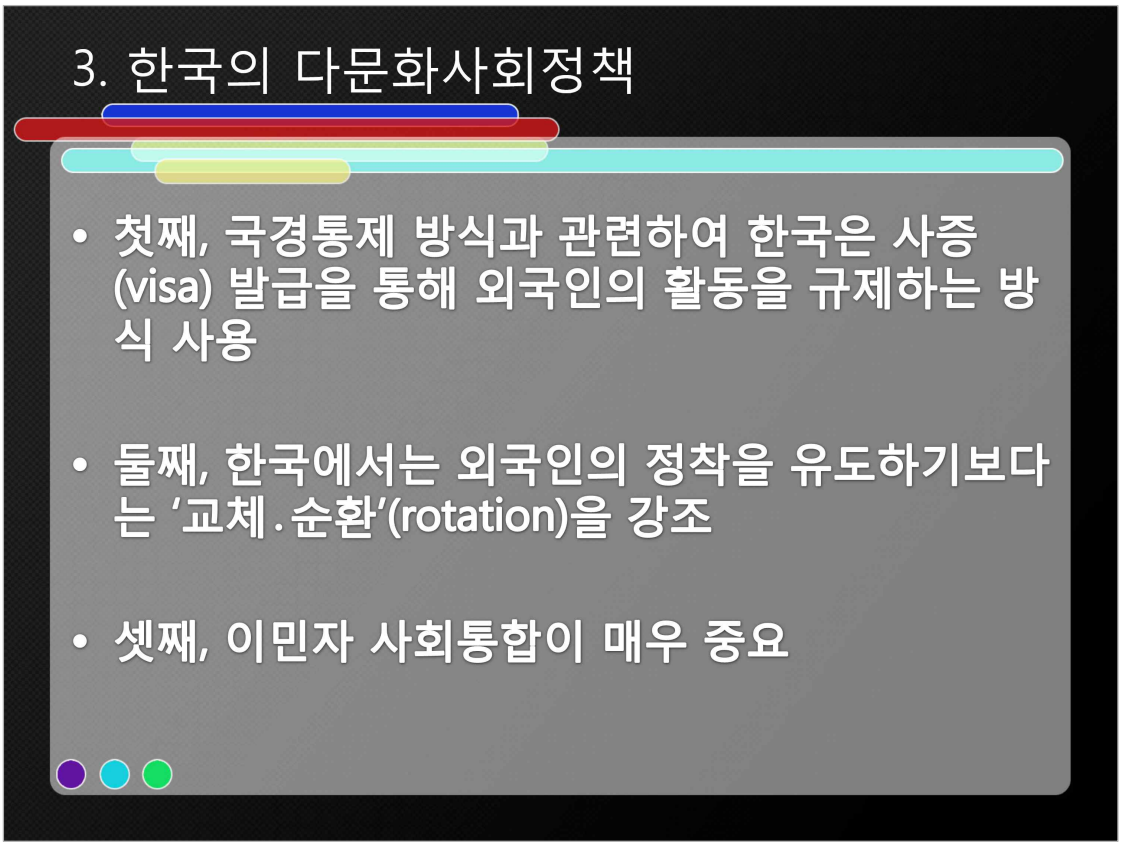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 5개년 계획'

3.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




3.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ies)
① 국경통제
② 외국인 체류관리
③ 이민자 사회통합
'외국인정책'
또는
'다문화사회정책'


3.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
• 첫째, 국경통제 방식과 관련하여 한국은 사증(visa) 발급을 통해 외국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 사용
• 둘째,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기보다는 '교체.순환'(rotation)을 강조
• 셋째, 이민자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

3.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

한국의 정책은 '동화정책'에 가깝지만
실상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정

함을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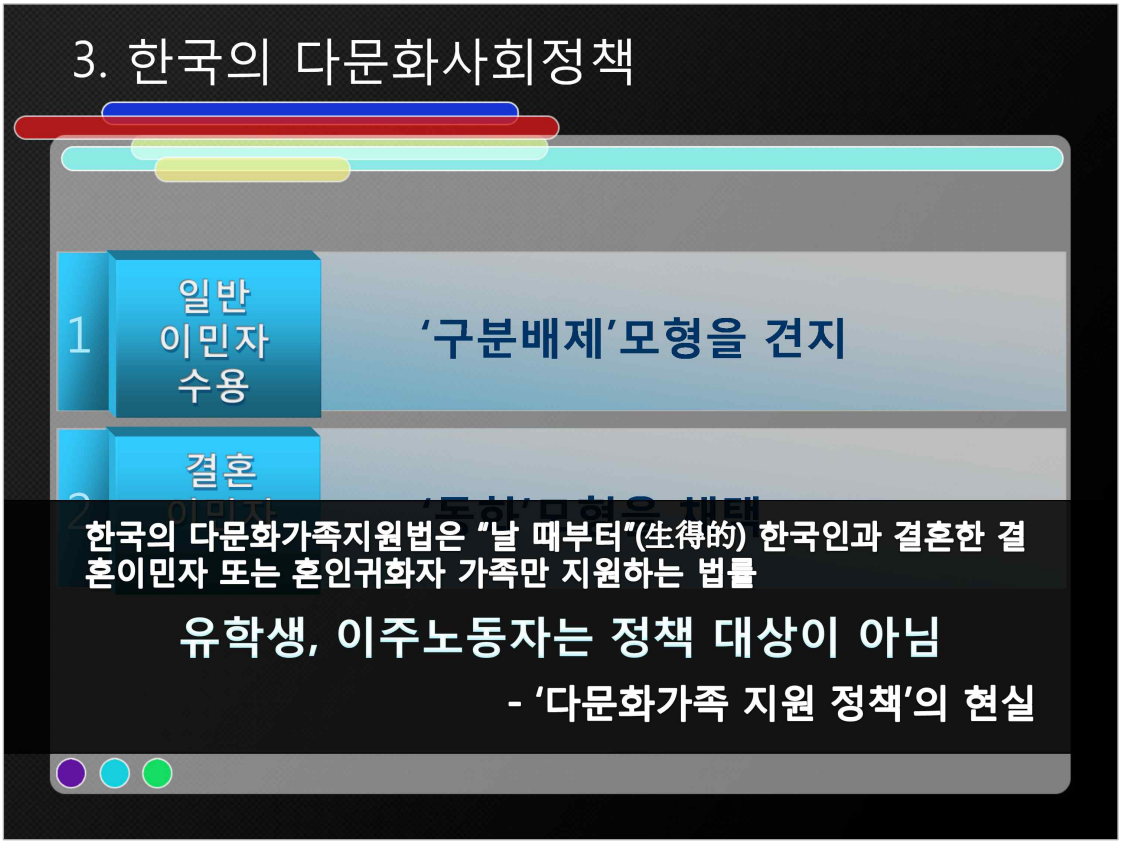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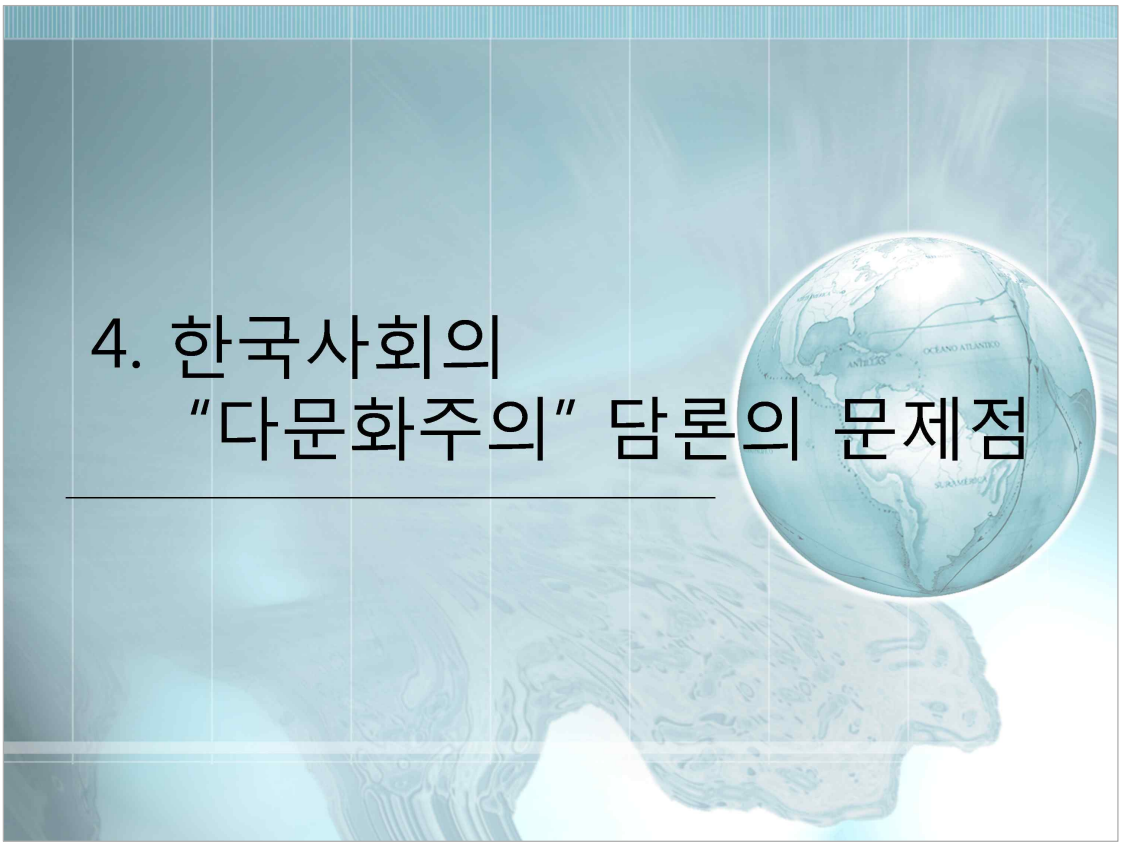
3.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

- 2009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 모형은 과거 독일의 그것
  = '교체순환원칙'과 '자국의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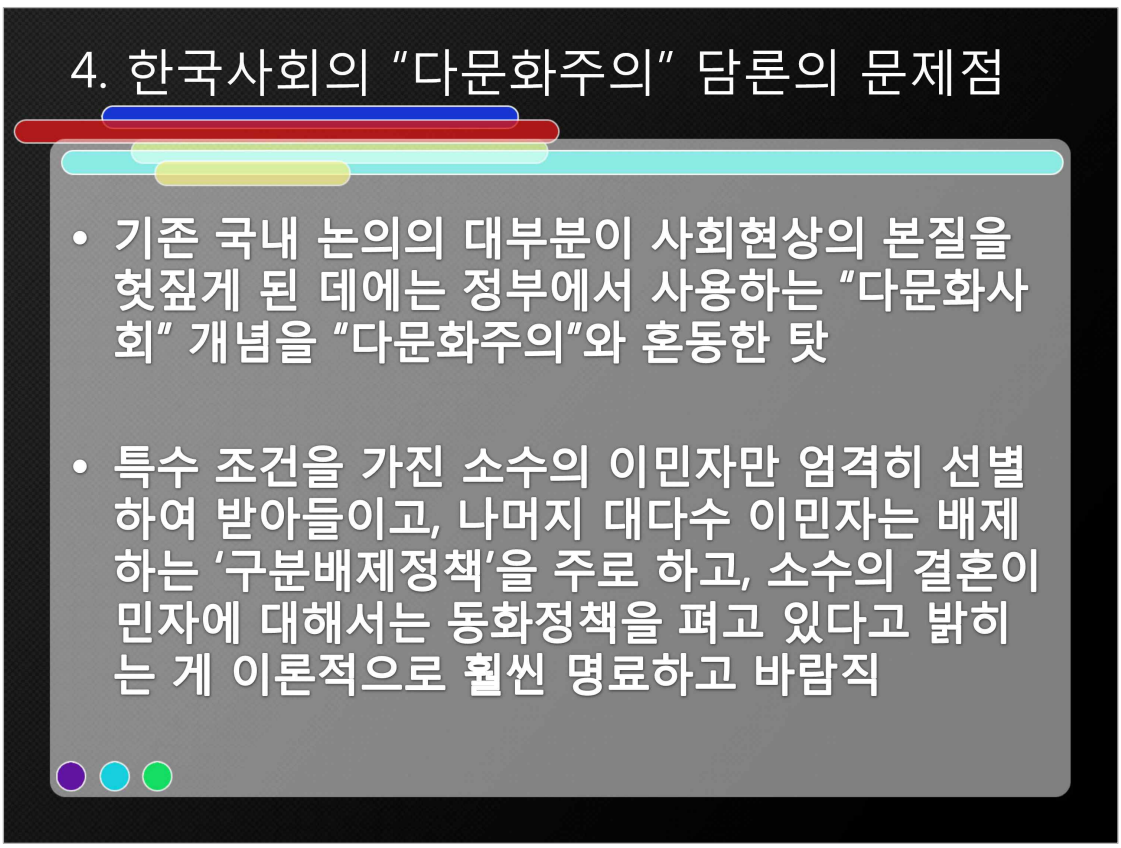
'구분배제' 모형
(differential exclusion)

그러나 독일은 21세기에 와서 이민정책의 기조를 '구분배제'에서 '이민자 적극 수용 및 동화정책을 통한 통합'으로 바꿈


3.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
1
일반 이민자 수용
'구분배제'모형을 견지
결혼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날 때부터"(生得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귀화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
유학생, 이주노동자는 정책 대상이 아님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현실


4.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


4.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
킴리카
(Will Kymlicka)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 시민권' 개념을 강조
마르티니엘로
(Marco Martiniello)
이민자 동화정책의 이념형적 사례인 프랑스의 정책에도 다문화주의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


4.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
• 기존 국내 논의의 대부분이 사회현상의 본질을 헛짚게 된 데에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사회" 개념을 "다문화주의"와 혼동한 탓
• 특수 조건을 가진 소수의 이민자만 엄격히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대다수 이민자는 배제하는 '구분배제정책'을 주로 하고, 소수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히는 게 이론적으로 훨씬 명료하고 바람직

4.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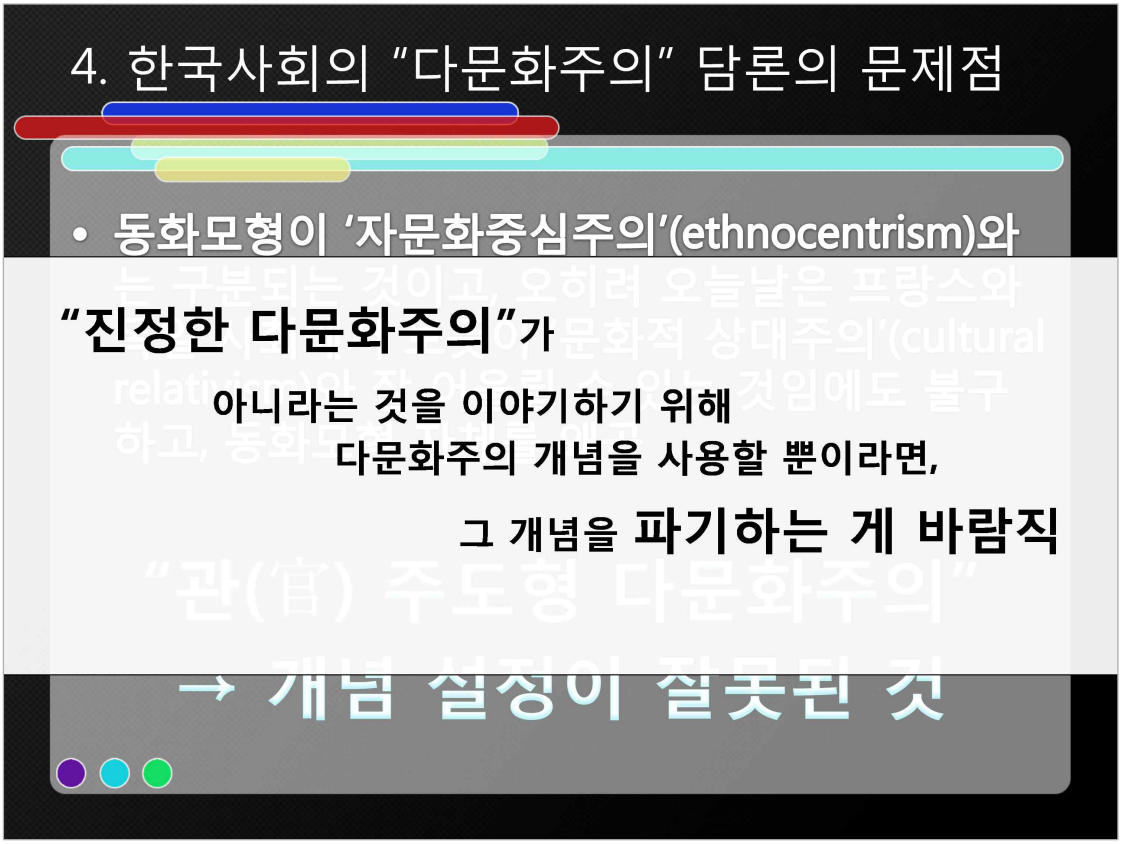
- 동화모형이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와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개념을 사용할 뿐이라면,

그 개념을 **파기하는 게 바람직**



5. "다문화사회" 한국의 인권

5. "다문화사회" 한국의 인권

- 다문화사회 개념이 '소수자 집단'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바탕을 둔 개념
- 외국인 또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자/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속성에 따라 인권침해 유형이 달라짐: ① 일시적 체류자(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② 영주자(화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③ 대한민국 국민(귀화자, 북한이탈주민,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

5. "다문화사회" 한국의 인권

-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차별 대우: ① 국수주의(chauvinism), ② 인종주의(racism), ③ 제노포비아(xenophobia), ④ 위계적 민족성(hierarchical nationhood), ⑤ '저숙련 생산직'의 '낮은 사회적 위신'(lower social prestige)로 설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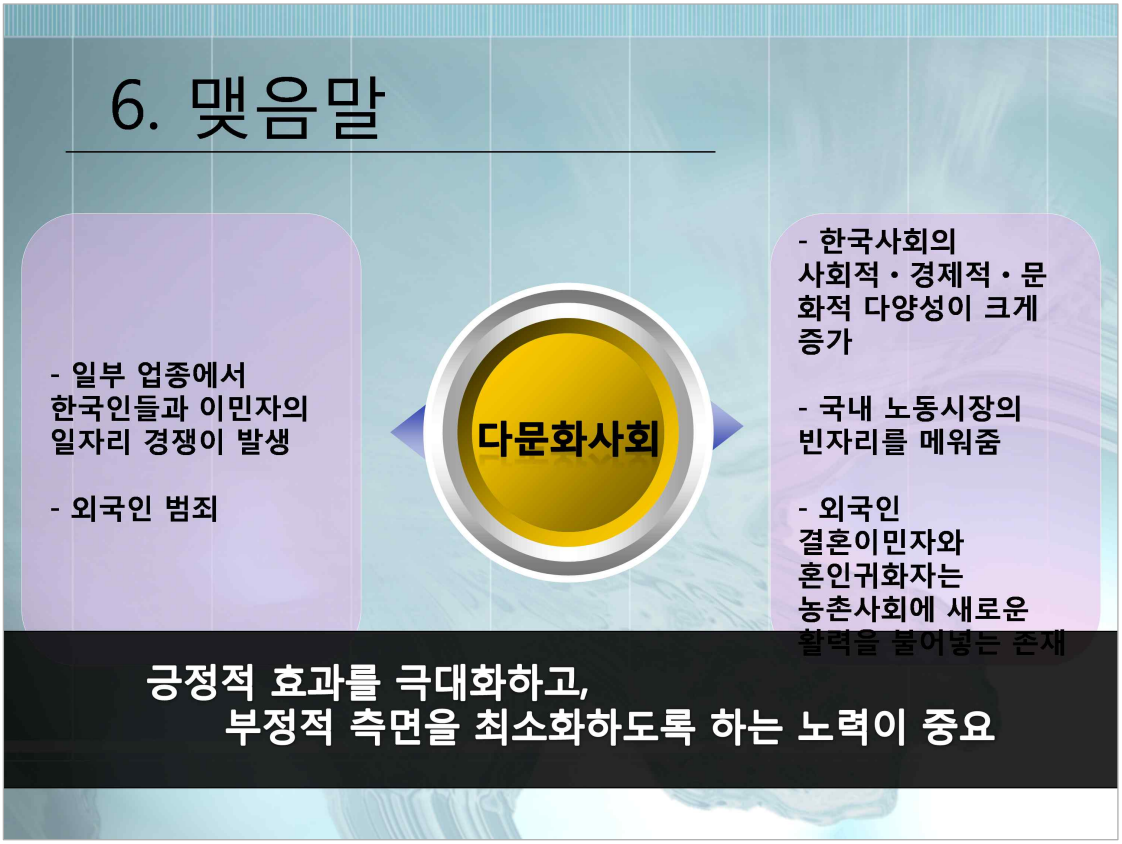
- 영주 외국인: 제도적으로는 내국인과의 차별을 거의 없앰. 주민3권(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향유. 일상생활에서 외모 또는 출신에 근거한 차별 경험

5. "다문화사회" 한국의 인권

- 대한민국 국민: ① 주한미군관련 혼혈인들의 경험은 "빈곤 → 높은 학교 중퇴율 → 노동시장에서 열세한 지위 → 빈곤"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요약. ②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도 그러한 궤적을 밟음. ③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그러한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 ☞ 그들도 외모 또는 출신에 근거한 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 외국인/이민자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고 시급함

6. 맺음말

1. 외국에서 수입한 "다문화주의" 이론을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을 설명하는 데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2. 거주국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방문취업제'와, "귀화한국인의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등은 시급히 시정해야


6. 맺음말
- 일부 업종에서 한국인들과 이민자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
- 외국인 범죄
다문화사회
-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
-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줌
-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


Thank You !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성찰적 접근

설 동 훈(전북대)

1. 한국사회: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

한국은 지구상에서 매우 희귀한, 동질적 종족집단(ethnic groups)으로 구성된 나라다. 미국 CIA의 The World Factbook (2009)에서는 한국의 종족집단이 약 2만 명의 화교를 제외하고는 "동질적이다"(homogeneous)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수종족 인구 또는 그 비율이 낮은 나라를 찾아보면, 남·북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일본의 다섯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은 그 중에서도 가장 동질적 나라다.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신화를 간직해 온 한국사회가 최근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동질적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이질적 문화를 아우르는 사회로 바뀐 직접적 원인은 외국인의 유입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주노동자가 들어 왔고, 1990년대 초부터는 결혼이민자가 그 대열에 합류하였고, 2000년 무렵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이 땅에 존재해 왔던 화교(華僑)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 집단이늘어났다.

한국에서 주민으로 생활하는 '외국인·귀화자 및 그 자녀' 수가 2009년에 100만 명을 넘었다.

2009년 5월 기준 행전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이 93만 명, 귀화자가 7만 명, 외국인또는 귀화자의 자녀가 9만 명이다. 그 통계에는 단기 방문자 또는 관광객 명목으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19만 명의 67%인 단기체류 사증 소지자 13만 명을 추가하면, 국내 '외국인 주민' 수만 106만 명에 달한다. 즉, 한국의 총인구 4851만 명의 2.5%에 달하는 외국인·귀화자 및 그 자녀가 국내에서 '주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펼쳐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어도,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에 있다고 말할 정도는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은 '외국인 인구 비율' 또는 '출생지가 다른 나라인 인구 비율' 면에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영주자와 귀화자를 아우르는 '정착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 나머지 대부분은 단기 교체순환 이주노동자 또는 방문자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정착 이민자로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사람들'과 '중국 산둥성(山東省) 출신 이민자의 후손인 화교'가 거의 전부다. 그 중에서 '지배집단'(dominant group)과 대립하는 '소수자 집단'(minority group)의 특성을 확연히 띠는 것은 화교뿐이다. 결혼이민자들은 주류사회에 동화되기 쉬운 존재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수종족을 언급할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he World Factbook의 "동질적"이라는 서술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소수종족을 주류 사회에 쉽게 동화되기 힘든 집단으로서, 집합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하면, 2009년 한국사회의 소수종족 인구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

요컨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준비와 도래'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은 자국사회의 과거 모습과 비교한 것일 뿐, 이민자 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 사회와는 감히 견주기 조차 힘들 정도다.

2.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전략: 발전국가의 공업화·세계화 전략의 연장선

지구상에서 가장 동질적인 나라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담론이 유행이다. 1990년대부터 학계와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거론하던 다문화사회라는 개념이 2006년에는 정부 정책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들어왔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로 채택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다문화가족과라는 행정 부서가 설치되었고, 몇몇 대학에서는 다문화연구소 또는 다문화학과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중앙과 지방 행정부처에서 수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 여러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에서도 국내외 학자들에게 다문화사회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다보니 다문화사회 관련 연구 실적도 대량 생산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도 다문화사회 특집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바야흐로 다문화사회 담론이 풍년이다.

다문화는 과거 개발연대의 근대화·공업화·정보화·세계화에 뒤이어, 한국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다. "- 화"(- 化, - zation)라는 단어는 원래 사회구조의 변동을 서술하는 개념이지만, 1960대 이후 한국에 등장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는 사회발전 전략 개념으로 그것을 채택해 왔다. 다문화는 한글과 한자로는 "-화"의 족보에 등록되었지만, 영어로는 "-zation" 계열이 아니다. 그것은 단일문화·동질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복합문화·이질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개념이다. 구태여 과거 개념들의 연속선상에 그것을 자리매기고자 할 경우 "다문화화" (multiculturalization)라고 표현해야 한다. 다문화든 다문화화든, 한국정부는 1990년대 세계화 발전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학에서의 영어강의" 등 세계화 정책을 다문화 개념에 뭉뚱그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발전국가의 개발만능주의 내지 경제발전지상주의 사고방식은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마저 지배한다. 다문화사회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수용을 선진화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공업화·정보화·세계화의 후속 단계인 선진화를 추구하는 데 이견이 별로 없는 한국인들은 다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에서 2003년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주제로 19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을 때,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매우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민자들은 국민경제에 일반적으로 보탬이 된

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에서 한국은 캐나다·뉴질랜드에 이어 3위였고, "이민자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비율에서 한국은 스웨덴·스위스·덴마크·노르웨이·프랑스 다음인 6위였다. "이민자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비율에서 한국은 캐나다·미국·뉴질랜드에 뒤이어 4위였고, "귀하의 나라에서는 이민자 수를 어느 정도 늘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한국은 이민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

은 나라로 나타났다. 그 순위는 캐나다·핀란드 다음인 3위였다.

유사한 결과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07년 전 세계 46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민자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입국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나라로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개방적 태도를 가진 나라였다. 대부분의 나라는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한국인은 외국인·이민자와 같은 땅에서 생활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민자 수용에서 오는 고충과 불편함보다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흡수하는 기회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태도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외국인·이민자에게 매우 우호적이다. 국제적 기업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가 2005년 세계 131개 초국적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23나라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과 취업허가 체계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에 우호적 정책을 펴는 나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각국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불만이라고 밝힌 비율을 측정한 결과, 대만은 1%에 불과하였고, 한국은 홍콩·캐나다와 동률인 2%였다.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이행'이란 '선진화'의 동의어다. 사실이 그렇다면, 어느 한국인이 그것을 반대하겠는가? 그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3년짜리 대형 연구 프로젝트의 제목이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가? 정부는 2008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정책 5개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외국인정책 5개년계획'은 과거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처럼 외국인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국가 계획으로서,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외국인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를 외국인 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적극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4대 정책목표와, 우수인재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원, 외국인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13개 주요 과제 등을 포함한다. 과거 국가 주도로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정부는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다문화사회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3.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

한국 정부는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ies)이라는 전문 용어 대신에 '외국인정책' 또는 '다문화사회정책'이라는 수사(rhetoric)를 사용한다. 이민정책은 ① 국경통제, ② 외국인 체류관리, ③이민자 사회통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정착하는 과정과 정확히 맞물린다. 다문화사회정책을 이민정책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만 지칭하여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를 '넓은 의미의 다문화사회정책', 후자를 '좁은 의미의 다문화사회정책'으로 부른다.

첫째, 국경통제 방식과 관련하여 한국은 사증(visa) 발급을 통해 외국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이 '입국 사증' 중심의 국경통제보다는 체류허가(residence permit)와 취업허가(work permit)를 통한 외국인의 활동 규제에 주력한다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사증 발급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통제를 중시한다. 유럽 대륙의 나라들은 국경이 사방으로 이웃나라와 접해 있어서 외국인의 유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입국은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되 체류와 취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신대륙의 미국과 캐나다는 한두 개의 이웃나라와 국경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국경 지역에 설치한 이민국 사무소에서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통해 '국경통제'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섬나라' 또는 '유사 섬나라'에서 사증제도를 국경통제의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휴전선으로 인해 만들어진 '유사 섬나라'라 할 수 있다. 섬나라에서는 이웃나라와 육로를 통한 인적 교류가 불가능하므로, 국경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활동의 범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외국인의 체류관리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기보다는 '교체·순환'(rotation)을 강조해 왔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두 나라 모두 정착 이민 수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머무른 후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이주노동자만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에 입각하여 받아들이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한국 정부는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력 부족보다는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정착 이민자를 수용할 경우 자국의 노동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국 사회가 동질적인 민족 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중요하다. 한국은 '단일민족의 신화'를 간직한, 세계적으로 매우 희소한 '동질적인 국민국가'를 이루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민자의 정착이 초래할 이질성을 포용할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정부는 '정착 이민자'보다는 '단기 이주노동자 또는 방문자' 중심의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을 채택해왔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재외동포의 후손'이 자국 사회와 문화적 마찰이 적을 것으로 보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충원하였다. 정부는 '방문취업제'를 실시하여 중국 조선족과 구소련 고려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타민족 이주노동자보다 자민족 이주노동자들이 문화갈등을 적게 야기할 것이라는 정책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의 중요한 특성이다.

한편, '자국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사증 발급에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재외공관의 사증 심사과정에서는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위장결혼 혐의자만 가려낼 뿐, 국내에 와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보호제도 등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그러다보니 결혼이민자 가구 중 상당수가 공공부조 수혜 집단임이 드러났지만, 외국인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신규 이민자에게 일정 기간 복지혜택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증을 발급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관행과 동등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자국인의 배우자'조차도 복지 혜택에서 내국인 대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 정부의 이민자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또는 적응을 연구하는 사회학

자들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흔히 ① 동화(assimilation)모형, ② 문화간주의 (interculturalism)모형, ③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모형으로 구분한다. 한국 정부의 정책은 어느 유형에 속할까? 그 정답을 찾기 위하여, 세 가지 정책 모형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화정책은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민자는 체류국의 언어와 문화 관습을 익히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다. '동화'(assimilation)는 소수 집단이 주류 문화의 관습과 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뜻하는데, 그 접근의 목표는 '단일 문화적'(monocultural) 양상을 지닌 통일성(unity)을 추구하는 데 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제는 동화정책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문화간주의정책은 이민자가 체류국 사회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주류사회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초래된 상황 변화에 적응하여야 함을 중시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표방하는 '쌍방적 적응'(mutual adaptation) 또는 '쌍방적 통합'(two-way integration)모형은 단일 문화적 기준을 토대로 하면서도 이민자와 수용국 사회 양자가 쌍방적으로 적응하도록 요구한다. '용광로'(melting pot)라 불리는 이 접근은 수용국 고유의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면서 이민자로 유입으로 인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즉 수용국 사회와 이민자 양자가 공동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자국 문화를 개조(改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의지가 특히 중요하다.

다문화주의정책은 캐나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소수민족지역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 소수민족에게 주류사회와 마찬가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 사회 내에서 한 개의 주류문화 대신 많은 하위문화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샐러드 그릇'(salad bowl) 또는 '무지개 연합'(rainbow coalition) 등으로 불리는 이 접근의 목표는 '다문화적'(multicultural) 특징을 보이는 다양성(diversity) 추구에 있다. 캐나다는 영어 사용 지역과 프랑스어 사용 지역으로 대별되는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퀘벡 지역이 낙후·T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연방에서 탈퇴하여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채택한 방식이 다문화주의다. 그 핵심은 소수민족의 문화적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는 데있다.

다문화주의는 신규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캐나다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단기간에 이루려는 것을 포기하고, 이민자들이 원래 갖고 있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한다. 동화정책의 경구를 응용하여 표현하면, "로마에서도 한국인들은 한국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캐나다 식 다문화주의 정책의 특성이다.

한편, 미국식 또는 영국식 다문화주의정책도 존재한다. 그것은 국가가 이민자들이 자국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방치 또는 방관하는 자체를 취하는 형태다. 영미식의 다문화주의는 '자유방임적 다문화주의', 캐나다식의 '국가개입적 다문화주의'로 부른다. 보통 그 두 세부유형을 아울러 다문화주의라 한다.

동화정책, 문화간주의정책, 다문화주의정책은 특정 나라의 이민자 통합 정책에서 추출한 '이념형'(ideal type)일 뿐, 실제 각 유형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내용이 매우 많다. 이를테면,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정부는 이민자에 대한 자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가 '동화'정책의 전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화정책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하는 게 필수적임을 깨달을 수 있다.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어느 유형에 속할까? 이 세 가지 정책중에서만 고를 경우,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은 '동화정책'에 가깝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프랑스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웃나라로부터 정착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21세기 접어든 후 독일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오는 정착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한국이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동화정책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하면 "소가 웃을 일이다."

2009년 현재 한국의 이민정책 모형은 과거 독일의 그것과 닮았다. 20세기까지 독일은 '교체순환원칙'과 '자국의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기 이주노동자'만 '노동력 부족이 심한일부 일자리에 국한하여 취업을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학자들은 과거 독일의 이민정책을 이민자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여 '구분배제'(differential exclusion)모형이라 부른다. 외국인의 대다수가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자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는 나라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거의 강조되지 않았다.

사회통합 정책에서 배제된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집단은 '격리'(segregation)의 대상이다. 격리는 다양한 인종・계급・직업・민족 집단을 분리하는 정책 또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격리 모형에서 이민자들은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 하도록 요구받고, 수용국의 단일 문화는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 그들의 사회참여와 권리 행사는 극도로 제한된다.

그러던 독일이 21세기에 와서 이민정책의 기조를 '구분배제'에서 '이민자 적극 수용 및 동화정책을 통한 통합'으로 바꾸었다. 2005년 발효된 독일 이민법에서는 독일이'이민국'(country of immigration)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이민정책의 기본원칙은 '구분배제 또는 격리'에서 '동화'로 전환하였다.

그러한 개념 틀에 비추어보면,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민자 수용의 측면에서는 '구분배제'모형을 견지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극소수 이민자(거의 전원이 결혼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정책은 '동화'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주류사회가 이민자 유입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고, 단지 다문화사회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만 난무할 뿐이다.

법률 용어로 "다문화" 개념이 도입된 맥락은 제17대 국회 제269회 여성가족소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사실은 이주민가족이지만 …… 사회적으로 낙인찍지 말자는 의미에서 다문화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취지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는 달리 '다문화가족 일반'이 아니라 "날 때부터"(生得的)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귀화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이다. 귀화한국인이 국제 결혼할 경우, 그의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유학생은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통한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그가 비록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도 없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가족이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이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의 핵심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현실이다.

4.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의 문제점

수많은 논자들이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주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개념 정의가 제 각각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다. 학계의 일부에서는 ‘다문화사’회는 외국인・이민자 등 사회의 이질성이 증가한 상태로, ‘다문화주의’는 정부에서 그들을 통합하는 정책의 유형으로 파악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다문화주의 개념에서 다문화사회를 연역해 낸다. 전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이민정책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 ‘동화’ 또는 ‘문화간주의’와 구별되는 정책으로 본다. 후자의 전통에 선 연구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소수자 집단의 시민권(citizenship)과 관련된 보편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말하자면,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로서 그러한 개념은 부적합한 것일 뿐이지만,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식 다문화주의” 또는 “한국형 다문화주의” 개념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 입장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하든 그것은 연구자의 자유고 그것은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개의 상이한 전통에서 도출된 개념을 무분별하게 섞어 쓰는 연구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대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글에서 후자의 입장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다.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킴리카(Will Kymlicka)의 ‘다문화주의’ 개념에서 다문화를 도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여성・흑인・토착민・동성애자 등 소수자 집단이 지배집단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둔시민권’ 개념을 강조한다. 이민자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은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세대를 경유하여 달성할 수밖에 없는 과정’임을 중시한다.

또한 그들은 프랑스 정치학자 마르티니엘로(Marco Martiniello)가 일반프랑스인 대상으로 문고본으로 작성한 책에 소개된 ‘다문화주의’ 개념을 빌려와서 다문화를 이해한다. 마르티니엘로는 이민자 동화정책의 이념형적 사례인 프랑스의 정책에도 다문화주의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이민자 통합 정책의 유형을 소개하면서,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가 사용한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을 은근슬쩍 “다원주의적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해버린다. “프랑스는 전적으로 동화적 접근을 채택하고, 네덜란드는 전적으로 다원주의적 접근만을 택하며, 독일은 전적으로 구분배제적 접근만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 지나치게 단순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어떤 한 나라가 동화적 모형에 그대로 충실하면서도 동화적 접근 대신 다원주의적 유형의 정책들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마르티니엘로는 다문화주의를 보편 개념으로 바꿔 놓고, 국가 유형론으로서의 다문화주의 개념을 파기하였으면서도, 프랑스도 “다문화주의 정책이 있다.”는 혼란스러운 주장을 하였다. 이념형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의 논리는 매우 취약하다. ‘공화주의적 동화 모형’을 당연히 여기는 프랑스 학계에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마르티니엘로의 저서는 한국어로 일찍이 번역되었고, 다문화 담론의 열풍과 함께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퍼져 나갔다. “다문화주의는 곧 다문화사회의 핵심 원리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국내의 논자들은 킴리카와 마르티니엘로 등의 다문화주의 개념을 토대로 다문화사회를 파악한다.

국내의 일부 논자들은 다문화주의 개념을 마치 '민주주의'와 같은, 모든 사회에 적용 가능한 보편 개념으로 사용한다. 민주주의적 요소가 일부만 있어도 민주주의가 되고, 모든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가치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그러한 용법을 따르면,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박정희가 주창했던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용례로,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이고 한국과 대만 및 일본도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인가? 기존 국내 논의의 대부분이 사회현상의 본질을 헛짚게 된 데에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사회" 개념을 "다문화주의"와 혼동한 탓이 크다.

지구상에서 극히 예외적일 정도로 종족적 소수자 집단 인구가 적은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 통합 정책을 다문화주의라 할 수 있을까?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통되는 '다문화주의'는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짓'의 포석으로 보인다."라거나, "대상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다문화는 진정한 다문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수 조건을 가진 소수의 이민자만 엄격히 선별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 대다수 이민자는 배제하는 '구분배제정책'을 주로 하고, 소수의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히는 게 이론적으로 훨씬 명료하고 바람직하다.

그들은 "다문화주의모형은 선(善)이고, 동화모형은 악(惡)이다"라는 주장을 과감히 설파한다. 동화모형이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오히려 오늘날은 프랑스와 독일 사회에서 보듯이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화모형 자체를 왜곡한다.

심지어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면하지 않는 것은 다문화주의에 어긋난다"고까지 주장한다. 독일과 일본 등 시민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사면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사면 경험이 있는 미국에서도 그것을 다문화주의와 연계시키지는 않는데, 일부 논자들은 "만능 개념" 다문화주의로 사면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관(官) 주도형 다문화주의"로 파악하는 것은 개념 설정 자체가 잘 못 되어 있다. 이민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니, 당연히 관이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2006년 정부가 다문화사회 담론을 갑자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학계와 언론 등 시민사회의 담론을 수용한 것이었음을 고려하고서도, 과연 그것을 '관'이 주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요컨대, 다문화주의는 '종족적 소수자 집단'과 지배집단의 갈등이 심각한 캐나다에서 출현한 개념으로 '종족적 소수자 집단'의 존재 자체가 미약한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매우 많다고 본다. "한국형 다문화주의" 또는 "한국적 다문화주의"는 결코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문화주의 개념을 사용할 뿐이라면, 그 개념을 파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5. 맺음말

외국에서 수입한 "다문화주의" 이론을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을 설명하는 데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상이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사회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할 경우 그 전제 조건의 충족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그 개념을 적용할 경우,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

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다문화주의에서 다문화사회를 연역하는 방식의 담론에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책적 결론은 그들과 거의 다르지 않다.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해 특혜를 베푸는 이민정책은 '국익추구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지만, 출신국의 경제발전수준 또는 국민 자격이 생득적이나 귀화에 의해 얻어진 것이냐에 따라 외국인·이민자를 차별하는 정책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의 거주국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방문취업제'와, "귀화한국인의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등은 시급히 시정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지상주의, 순수혈통주의 등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막고 있다는 해석에도 의견을 같이 한다.

다문화사회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빛의 측면으로, 한국사회에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주어 경제 발전을 지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어두운 측면도 있다. 일부 업종에서 한국인들과 이민자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문화사회 준비는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태도와 행동도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이민자에 대하여 배타적·차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다문화 시대를 사는 한국인과 이민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질적 외모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그 길은 다양성에 의해 야기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사회적 과정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종족적 소수자 집단의 인구가 별로 많지 않으므로, 다소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심각한 갈등 없이, 주류사회와 이민자가 상호적응의 지혜를 학습할 기회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다문화사회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핵심 과정이다.

제2주제 – 다문화 사회 현실과 교육

박 천 웅(안산이주민센터 소장)

다문화 사회 현실과 교육

박 천 응
(사)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사) 국경없는 마을 이사장

1. 현대 다문화 요구의 흐름

학교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공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다. 1896년에 흑인학생이 백인학교 입학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법원은 "분리하나 평등(separate but equal)"으로 판결하였다. 이는 학교의 시설이나 교사의 자질이 동등하다면 백인과 흑인을 분리시켜서 교육하여도 교육기회의 균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학교의 평등과 관련하여 지침이 되어왔으나,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흑인학생들이 백인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뒤떨어지며, 이들 흑인학생 대부분이 흑인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1954년 브라운 대 토페가 교육 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의 소송사건에서 인종 분리교육은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인종통합 문제는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1) 평등적 관점에서 다문화적 요구(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와 함께 평등의 관점에서 다문화적 요구가 나타났다. 초기의 다문화주의는 흑인의 민권운동, 제3세계의 평등주의 운동, 포스트 모던적 자유주의 운동 등이 불을 켰다. 16세기 식민지 지배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문화를 중심으로 나라와 대륙의 문화들이 차등화 되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유럽 내에서 벌어진 사회개혁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의 자유주의 운동은 유럽중심 문화에 대한 거부였다. 특히 민권운동은 초기에는 학교에서의 인종주의에 반격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개념화되었으나, 인종, 민족, 성별, 사회 계층, 언어와 장애 문제와 관련된 학교 개혁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2) 다문화란 용어와 정책의 등장 (1970년대 이후)

1970년대 이후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는 새로운 요구가 나타났다. 이는 앵글로색슨 족을 중심으로 한 영어를 사용하는 백호주의문화에 대항하는 유럽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요구였다. 아울러 식민지 이후 현지에 계속 남아서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유럽백인들이 현지 원주민들에 대한 유화정책으로 문화적 상대성을 들고 나왔다. 특히 포스트모던 주의는 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가 모두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주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은 구체화 하도록 만들었다.

3) 세계화와 다문화(1980년대 이후)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세계 일류, 세계 최고가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세계화는 문화의 수출입을 통해 생활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준화를 시켜 나간다. 동시에 세계화로 인한 개방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어느 일방의 문화를 세계의 모든 나라에 강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의 번창과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4) 공동체 사회로서 다문화 (2000년대 이후)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문화에 대한 요구 자체가 각 분야에서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적 접근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주민의 의사결정의 참여와 시민적 권리, 경제적 차원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화 전략,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걸맞는 경쟁력 확보, 문화적으로는 포스트모던적 문화예술의 새로운 시도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과 선진국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다문화 정책 자체가 국가의 생존과 유지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2. 다문화 교육의 정의

1)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한민족은 대한민국의 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수자이다. 한국 사회는 다인종 사회이다. 국내 유입 인구 외국인이 100만, 즉 국민의 2%를 넘어서고 있다. 스위스 23.8%, 네덜란드 19.3%에 비하면 이주민의 분포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2%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UN에서 보고하기를 출생률이 낮고 타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인 나라로서 향후 국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경고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새로운 국민국가와 공동체 형성에 필수 영역이다. 다문화 교육은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의 영역이다.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다문화의 영역은 강조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차이가 차별로 자리 잡는 배타의 문화에서는 다수자인 대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 영역이 된다.

2) 다문화 교육의 정의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표현과 주장은 다양하다. 뱅크스(Banks)는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 민족, 계급출신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변화'라고 본다. 캄벨(Cambell)은 '다문화교육이란 문화적,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상호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다.'라고 본다. 벤네트(Bennett)는 '다문화 교육을 교수-학습에 대한 접근의 하나로 보고 다문화 교육을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가치와 신념에 기초하여 다문화주의를 촉진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으로 본다. Nieto는 다문화 교육을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과 종합적인 학교 개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다문화 창조 교육은 다수와 소수자가 새로운 관계 방식을 통하여 더불어 행복 한 세상 만들어나가는 실천적 창조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을 행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유형도 구분된다.

3) 다문화 교육의 특징

다문화 교육을 다음 일곱 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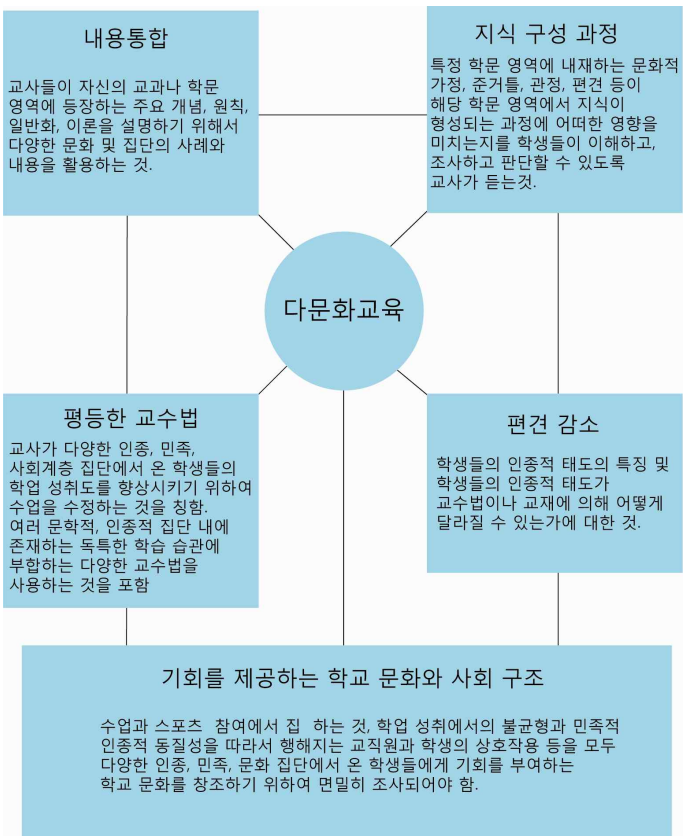
① 다문화 교육은 평등을 추구하는 철학적 개념이 교육과정 **속에 적용된다.**
② 특정 인종이나 집단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③ 사회적 공평과 평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사회 정의적 교육이다.
④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활동 및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사회 실천 교육이다.
⑤ 다문화 교육은 기본 교육과정으로 세계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⑥ 교육개혁 운동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종합적 개혁과정이다.
⑦ **다문화 교육은** 한번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닌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다.

3. 다문화 교육의 유형 분류

1) 다문화 교육 이론의 분류

뱅크(Banks)는 다문화 교육의 저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다섯 가지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는데, 내용통합, 지식 구성 과정, 편견 제거, 평등 교육,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의 권한 부여이다.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차원들



① **내용 통합**(content integration)은 과목의 중요 개념, 원리, 일반화, 이론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문화 집단으로부터의 예시, 자료, 정보를 사용하는 단계이다. 어떤 정보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현존하는 교육과정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 교육과정 어느 부분에 삽입되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② **지식 구성 과정**(knowledge construction process)은 사회, 행동, 자연 과학자들이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이 형성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 안의 함축된 문화적 가정, 창조의 틀, 관점, 편견의 절차를 묘사하는 단계이다. 주류 사회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 구조 과정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관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혁 학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③ **다문화 교육의 편견 감소**(prejudice reduction) 차원은 좀 더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를 가지도록 돕는 전략을 제안하고 인종에 대한 태도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편견 감소는 아동의 인종에 대한 태도와 자아정체감 인식 부분, 인종 태도의 수정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④ **평등 교육**(equity pedagogy)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 계층의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도와주는 기법과 방법을 사용하는 단계이다.

⑤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에 권한부여**(empowering school culture)는 앞에 네 가지 차원이 문화 혹은 사회 체제 측면인 학교와 관련이 있지만, 마지막 단계는 학교를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과정, 교수자료, 카운슬링 프로그램, 교수 전략보다 더 큰 하나의 사회 체제로 개념화한다.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개념은 학교의 문화와 조직을 재조직하여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 계층 출신의 학생이 교육 평등과 문화적 권한부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문화 인식에 따른 분류

슈와르츠(Schwartz)는 다문화 교육을 주류다문화와 비판적 다문화로 분류하였다.

① 주류다문화교육

주류다문화교육은 학교 혹은 사회 전체로서 변형시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관점이다. 주류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는 타자를 다루면서 철저히 자국문화와 구별되는 다른 문화들의 이해 관점이다. 따라서 타문화를 이해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자 문화 혹은 주류문화에 동화시키려는 것이다. 소수문화와 존재와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주류문화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서 비주류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② 비판적 다문화 교육

문화의 다양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 자체에도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지배적인 문화존재는 인정 될 수 없으며, 현존하는 언어, 문화, 권력, 이데올로기, 사회와 제도 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지 보여줌으로써 문화의 정치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비판적 다문화 교육이다. 비판적 다문화 교육은 지배문화의 포섭적 다문화주의를 배격하고, 단순한 다양성의 추구가 아니라 문화적 자아비판과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한다.

3) 다문화 교육 접근법에 의한 분류

Gibson(1976)은 민족성에 근거한 문화적 다원론입장에서 다문화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조직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발전적인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① **문화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 교육** (multicultural education for cross– cultural understanding)으로, 서로 다른 권리와 다른 문화 구성원의 요구를 확인하고 서로 존중하는 교수 전략을 강조하는 단계이다.

② **문화적으로 응답하는 교육**(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수업 매개로서 소수 집단 문화를 포함하여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을 증진시키는 단계이다.

③ **이중 문화 교육**(bicultural education)으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류 문화의 언어와 다른 기술적 기능을 가르침과 동시에 소수 민족 학생의 문화, 언어,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도록 고안된 단계이다.

④ **교육의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in education)로, 민족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유지 고양시키고, 소수 민족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참여를 증가시키는 단계이다.

⑤ **인간 경험으로서의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as the normal human experience)으로, 개인이 다문화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4) 다문화 창조주의적 입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유형

① 다수자 입장에서의 다문화교육

다수자 입장에서의 다문화는 정치적 결집과 통합 및 통제의 수단으로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한다.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다가도 주류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못된다고 하면 소수자를 통제와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 시킨다. 다수자 입장에서의 다문화는 소수자들의 수용과 퇴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으로 게토화 시키든지, 체류신분을 불안정한 상태로 묶어 두려는 경향이 있다. 주로 아프리카 남아공화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

② 소수자 입장에서의 다문화교육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격렬했던 소수 인종 집단의 권리 추구 운동, 국가 간 이주의 증가, 국경의 강화, 그리고 국민 국가 수의 증가로 인해 세계화 시대의 다양성 및 시민교육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국가 간 이주의 증가, 민주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 그리고 국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당성의 확산으로 다문화가 발전하였다.

③ 공동체지향의 다문화교육

21세기에 불고 있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다문화 운동의 흐름이다. 공동체 지향의 다문화는 자유와 평등

평화의 실현을 위해 상호이해, 상호수용 나아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존을 모색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간다. 공존을 넘어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이다.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과 같은 운동이 대표적이다.

5) 다문화 교육 기법에 의한 분류

슬리터와 그랜트(Sleeter & Grant)는 다문화 교육의 일반화된 다섯 가지 기법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모형은 Gibson 모형의 구체적 범주나 기본 주제와 유사하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섯 가지 접근법은 Bank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서 분석에 근거하여 나뉘어졌다. 다섯 가지 접근법은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기, 인간관계, 단일 집단 연구, 다문화 교육, 다문화와 사회 재건을 위한 교육이다.

①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기(teaching culturally different)**는 가장 전통적이고 동화론적인 방법이다. 이 단계는 주류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 현존하는 구조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기술, 언어, 가치를 가르치는 단계이다. 이것은 "결핍 철학(deficit philosophy)"에 근거한 것으로 Headstart나 영어 몰입 프로그램 같은 보상 프로그램의 형태로 나타난다. 교사의 역할은 소수 집단의 학생과 지배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② **인간 관계(human relations)**이다. 이 단계는 문화 각성, 편견과 스테레오 타입의 감소, 집단의 자아정체감과 자부심을 고양하도록 가르치는 다양한 교수 전략을 사용하여 집단 간의 조화를 신장하는데 강조를 둔다. 기대되는 결과는 다양한 집단 간의 존중, 인내, 이해, 수용, 자기 존중, 집단과 개인의 독립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③ **단일 집단 연구(single-group studies)**는 한 번에 한 집단에 대한 지식, 인식, 존중, 수용을 획득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집단은 민족성, 사회 계층, 성별, 장애와 관련되어 있다. 학생들은 목표한 집단의 문화, 기여도, 억압의 형태와 함께 현재와 역사적 갈등, 관점, 경험을 배운다.

④ **다문화 교육(multicultral education)**은 편견 감소, 평등한 교육 기회, 사회 정의, 문화 다양성의 인정을 강조한다. 단일 집단 연구와 다른 점은 동시에 다수의 집단, 전체적인 학교 과정의 개혁, 모든 학생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교육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혁의 중심이 개별 집단에서 집단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개념, 주제, 문제 관심으로 옮겨간다.

⑤ **다문화와 사회 재건을 위한 교육(education that is multicultural and social reconstructionist)**이다. 인종, 계층, 성별, 능력 집단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계층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분석적 사고를 발전시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회적 조치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가르치며, 학생 스스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본인의 목적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대되는 결과는 모든 종류의 인종, 민족, 문화 집단의 불평등, 편견, 억압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 실천주의와 재건주의이다.

6) 교육의 초점에 따른 유형

엘더링(Eldering)은 다문화 교육을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손보충(disadvantage approach), 다문화 체험(enrichment approach), 집단적 행동(collective equality approach), 이중문화 수행능력(bicultural competence approach) 등으로 구분된다.

4. 다문화 교육의 목표

1) 다중시민성의 다문화 교육의 방향

'세계화 시대의 다중시민성'연구에 따르면, 국가시민을 초월한 세계 시민으로서 지니게 되는 정체성은 다중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세계시민은 한편으로는 공존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최대한 관용하고 존중하는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 시민은 인류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 간의 역동적인 중첩합의를 통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시민인 것이다. 아울러 보편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경외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2)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의 목표 네 가지

① 다른 문화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욱 더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 행동 등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자기성찰적인 반성이 다문화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문화적, 인종적 대안 책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 받아온 교육 내용은 사회지배적인 계층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것은 비주류계층의 문화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롭게 도래하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③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 인종의 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세계 다른 모든 문화권 안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 태도,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④ 소수 인종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통을 줄이고, 종교, 사회적 계층, 성별의 다양한 집단들에 속한 사람들이 개개인 존재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다문화의 창조주의 교육의 목표

다문화창조주의 교육의 목표는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이다. 다문화 창조주의 교육은 '다양성, 관계성, 창조성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목표는 소수자입장, 다수자입장, 공동체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문화 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다양성의 수용과 사회적 공동체의 형성에 있다. 즉, 다문화 교육의 핵심 과제는 소수자 주체화, 다수자 변화, 공동체 형성에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수자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관용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자신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은 획일적인 역사관을 극복하게 한다. 다문화 사회교육은 그러한 측면에서 타자에 관한 교육이다. 다수자와 소수자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우리역사 안에 함께 해 온 이민족의 역사를 발굴 기술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순수혈통주의나 민족적 우월주의의 극복을 통한 제3의 정체성을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 주체로 서게 하는데 있다.

다수자 입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게 된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문제는 이제까지 노동력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의 문제이거나, 새롭게 등장한 복지의 대상으로서 소외된 이주 노동자 계층의 문제로만 이해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인권보호 운동, 국경없는 시민권 영역의 확대가 지속되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소수자 스스로 주체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공동체 사회 형성은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용과 이해, 사랑의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다. 다문화 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주체성을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 어떤 문화권과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평화교육'이다.

5. 다문화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모형

1) 반 인종주의와 편견 감소 이론

뱅크(Banks)와 베네트(Bennett)는 다문화 교육에서의 반 인종주의와 편견 감소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골든 알포트(Gordon Allport)의 편견의 본성과 사회적 접촉 이론을 언급하였다. 베네트(Bennett)는 1948년 미국 인권 선언과 인디언의 전통적 철학으로부터 국제적 다문화 관점을 위한 모형(Model for Global and Multicultrual Perspective)의 핵심 가치를 만들었다. 네 가지 주요 민주주의 가치는 (1) 문화 다양성 수용 (2) 인간 존엄의 존중 (3) 국제 사회 존중 (4) 지구 존중이다. 이러한 가치는 가정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의 다문화와 국제화 측면을 전달하는 중요 목표에 근간을 제공해 준다. 목표와 가치간의 역동적 관계는 다문화와 국제화, 인권, 이해, 정의, 평등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뱅크스(Banks)는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 다양한 민족 인종 집단의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수업교재에 일관되고 자연스럽고 통합적으로 포함시켜라

나. 학생들의 타인종 타민족집단 구성원들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라.

다. 학생들을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과 함께하는 간접 경험에 참여 시켜라. 그러나 타 집단과의 간접 경험은 학생들에게 이 집단 내부의 다양한 유형의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해줘야 한다.

라.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인종 간 접촉상황에 참여시켜라. 단순한 접촉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인종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마.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의 긍정적 격려를 제공하라.
바.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 출신의 아이들을 협동 학습 활동에 참여시켜라.

2) 다문화 기본 기술

게이(Gay)는 다문화 문맥 안에 민족적 자아정체감 모형을 설계했는데,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사회 발달 심리학을 기초로 삼았다. 게이(Gay)는 일반 교육과 다문화 교육과정 계획 간의 상호 관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통합된 다문화 기본 기술(Integrative Multicultural Basic Skills, IMBS) 모형을 만들었다. IMBS 모형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역동적인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된 다문화 기본 기능 모형(IM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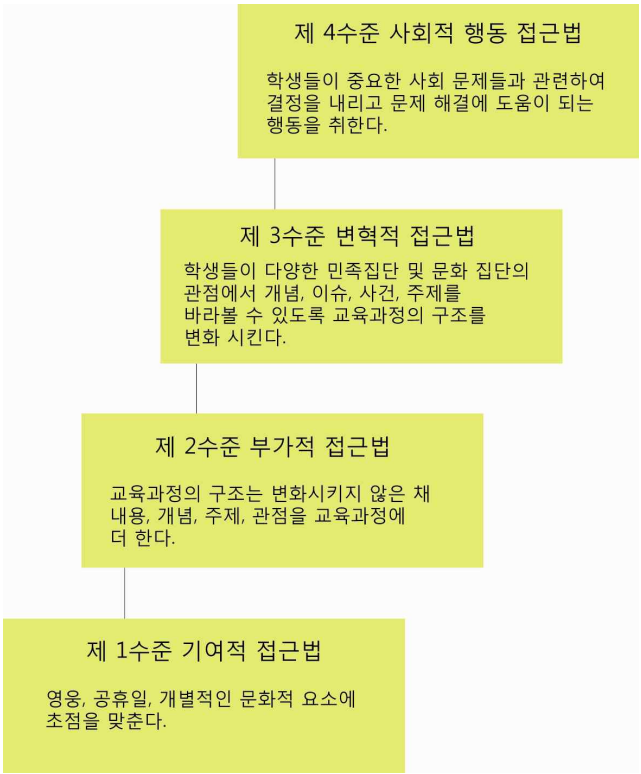
① 교육과정 결정의 **중심(core)이다**. 문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과목 구체적 기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교육자들이 교육과정 생성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activities)을 포함한다. 이것은 요구결정, 수업의 내용과 자료 선택, 수행 평가 도구와 기법 등을 포함한다.
③ 다문화 자원(multicultural resource)이다. 다원적 자원은 문화 다원론적 기여, 관점, 경험, 역사, 문화 등을 의미한다. 다문화 자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계획과 모든 수행 결정에 생태학적인 환경과 참조의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 접근법

뱅크는 민족 내용을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집단에 대해 가르치기 위하여 네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① 기여적(contribution) 접근법은 영웅, 명절, 특별한 문화적 요소에 강조를 두는 것이다.
② 부가적(additive)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민족적 내용, 주제, 관점을 교육과정에 부가하는 것이다.
③ 전환적(transformation)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구조를 바꾸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문제, 사건, 주제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④ 사회적 활동(social action) 접근법에서 학생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교육과정 개혁 접근법



6. 다문화 창조교육의 내용

1) 교육을 통한 다문화 능력 개발

메이어(Meyer)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다문화적 행동 능력'의 개발에 두고 세 가지 촉진 과정을 설정하였다.

메이어의 다문화적 행동능력

촉진과정	다문화적 행동 능력
개인 가치관 형성	1) 다문화적 상황과 관계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는 능력
	2)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는 능력
	3)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없애는 능력
	4) 타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기초 지식 습득	5) 이주민의 역사, 종교, 문화, 차별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적용방법의 터득	6)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
	7) 다문화적 맥락에서 갈등을 이해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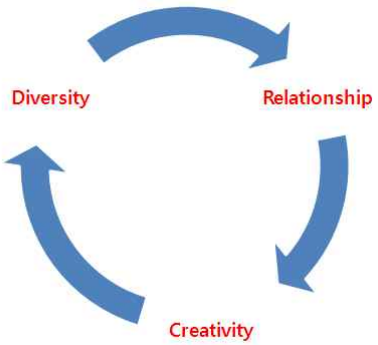
①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혁운동

② 동등성, 정당성, 인권과 같은 민주주의 이상을 실천하는 목적

③ 민주주의 이상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 항상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하는 끝나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2) 다문화 창조 교육 내용

다문화 창조주의 3영역(DRC)



1) 다양성 (Diversity)

(1)정체성 ①존재의 본질 ②동질성 ③선택

(2)차 이 ①다름 ②분별 ③상대성

(3)조 화 ①신뢰 ②자기결정권 ③통합

2) 관계성 (Relationship)

(1) 다수자 ①인권과 윤리 ②인식과 구조 개선 ③다문화 시민성

(2)소수자 ①평등적 권리 ②자존감 ③참여리더십

(3)공동체 ①배려 ②협동성 ③관계망

3) 창조성 (Creativity)

(1)상상력 ①오감 ②직감 ③영성

(2)창의성 ①정반합 ②대립물의 경쟁 ③융합

(3)디자인 ①개인 ②사회 ③문화

(1) 다양성의 교육

모든 사물은 동일하지 않다. 다만 비슷한 것을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동일하다고 생각한 그 것들조차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의 발견은 두 가지가 전제 된다.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에 분명 해야 차이를 발견한다. 두 번째는 모든 동일함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고이다. 차이는 상호 대립, 경쟁, 차별을 만들기도 하지만 상호의 필요에 의하여 상생의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① 정체성

가. 개인적 자아성찰과 자기 정체성 인식

나. 출신지역과 거주자 내부에서 공유되는 문화, 가치, 상징

다. 동일 구성원의 정체성과 동질감 형성의 특징

라. 관점, 세계관, 판단의 준거 만들기 훈련

마. 문화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 시민성, 정체성

② 차이

가. 다름에 대한 개념, 의미, 가치 등에 대한 이해
나. 차이에 대한 감수성 훈련
다. 다양성에 대한 주요 가치,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
라. 남녀, 동양과 서양, 사물, 사람, 문화 등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분별 의식
마. 여러 민족 집단의 역사와 문화, 경제 등 대한 지식
바. 동일 집단의 내부의 다양성
사.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올바른 지식과 기능, 가치 수립

③ 조화
나. 차이에 대한 긍정성과 개방성 훈련
다. 문화적 다양성의 상호 인정과 공존의 훈련
라. 부분과 전체의 조화 훈련
마. 공존의 조화와 수용의 통합에 대한 분별

(2) 관계성의 교육

교육의 기본은 변화에 있다. 즉, 자신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 환경의 변화이다. 변화는 특별히 관계의 회복이며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사회 및 환경과의 관계 회복이다. 본래 인간은 세상만물 안에서 조화롭게 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람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과 같은 경쟁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이 맺은 모든 관계를 파괴적으로 돌려놓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민족과 문화가 함께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할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에 있어서 공통기준은 관계 회복에 있다.

① 다수자
가. 다양한 민족이 지향하는 타문화이해교육(Cross-cultural Education)
나. 고정관념, 편견, 차별,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등 인권과 정의 교육
다. 다문화 윤리에 관한 교육
라. 차별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의제 형성 능력 교육
마. 시민성 대한 재인식 및 다문화 시민성 교육
바. 소수자 권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경 없는 시민권 교육

② 소수자
가.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타문화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혼란에 대한 대응 및 적응
나. 제3의 정체성 및 차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아정립 훈련
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 및 사회적 관계 형성 교육
라. 불평등한 개인, 집단, 국제 사회의 구조 등 인권 감수성 훈련
마. 다양한 차별적 구조에 대한 도전, 폭로 등 자의식 개발

바. 소수자 권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경 없는 시민권 교육
사. 소수자의 주체화 및 지역사회 참여, 차이의 정치화 등 리더십 훈련

③ 공동체
가. 배려, 공존, 협력을 위한 인간관계 훈련
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민족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다. 다문화 사회의 공동체적인 법과 제도 의제형성 훈련
라. 대안적 다문화 지역 공동체 형성 훈련
마. 다양한 지역사회 소그룹 관계망 형성 훈련
바. 다문화 지역사회의 다문화 학습센터 및 평생 교육장 활성화

(3) 창조성의 교육

다문화 교육은 신화적이며 만화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하며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중요한 창조적 도구이다. 다문화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기존의 것을 혁신 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하거나, 조합되어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형성해 내는데 아주 유효한 창조의 도구이다. 다문화 창조 교육은 변화와 재생산, 창조의 과정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창출의 과정이다.

① 상상력
가. 지역 사회의 다문화 이야기 클럽 훈련
나. 개인과 가족, 지역의 행복한 상상 만들기 훈련
다. 다양한 상상력 학습 및 상상력 학습 13가지 생각 도구 훈련

② 창의성
가. 새로운 눈으로 세상 보기 즉, 고정관념, 편견,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교육
나. 모든 것은 동일하지 않으며 변한다는 철학적 훈련으로 사물 보기
다. 차이의 가치를 통한 분해, 결합, 융합 등 다양한 문화 재창조 훈련
라. 뇌 훈련, 직관력 및 통찰력 훈련
마. 갈등과 문제의 창조적 해결 능력

③ 디자인
가. 다문화 사회가치 발굴 훈련
나. 차이를 강점으로 하는 리더십 훈련
다. 조직과 지역사회의 비전 달성을 위한 디자인 훈련
라.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디자인 훈련

핵심용어정리

■ **다문화 창조 교육 :** '다수자와 소수자가 새로운 관계 방식을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적 교육이다.'라고 본다.

■ **주류 다문화 교육 :** 학교 혹은 사회 전체로서 변형시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관점이다.

■ **비판적 다문화 교육 :** 문화의 다양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 자체에도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학습정리

1. **다문화 교육의 정의 :** 다문화 창조 교육은 다수자와 소수자가 새로운 관계 방식을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어나가는 실천적 창조 교육이다.

2. **다문화 교육의 목표 :** 다문화 교육은 국가시민을 초월한 세계시민을 목표로 하는데, 문화적 다양성, 관용과 존중, 공존과 협력의 자세를 강조한다.

3. **다문화 창조주의 교육의 내용 :** 다문화 창조주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며, 평화를 기반으로한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과 상상력에 기초한 창조성과 관계회복을 내용으로 한다.

전북다문화포럼 위원

연번	성명	성별	소속기관 및 직위	직위	핸드폰	이메일	희망 분과
1	백종만	남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8- 620-4210	jb2963@jbnu.ac.kr	사회
2	설동훈	남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010-8931-3022	dhseol@gmail.com	사회
3	최원규	남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6- 651-3436	jb2964@chonbuk.ac.kr	복지
4	이정덕	남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010-2343-8589	jdyi@chonbuk.ac.kr	문화
5	정태석	남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010-4107-2789	tsjeong@jbnu.ac.kr	사회
6	김혜경	여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019- 535-2716	hkkimyou@jbnu.ac.kr	사회
7	이혜숙	여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0-7103-2445	daycare@hanil.ac.kr	복지
8	김 인	남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6- 684-7057	inkim65@hanil.ac.kr	-
9	남연희	여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0-3824-8018	namyoyo@hanmail.net	복지
10	윤찬영	남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0-6437-2318	pjyooncy@yahoo.co.kr	-
11	장미영	여	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011-9648-4164	hadajang@hanmail.net	교육
12	이호준	남	전주대 상담학과	교수	011-9668-4214	hjlee@jj.ac.kr	-
13	신영화	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016-264-0820	yhsshim@kunsan.ac.kr	-
14	오교성	남	군장대 다문화연구소	소장	011-637-8745	0116378745@hanmail.net	교육
15	김태호	남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011-9094-1586	thkim@woosuk.ac.kr	교육
16	안옥희	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010-6217-6467	ohahn@woosuk.ac.kr	복지
17	이성희	여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017- 654-1420	sorak61@hanmail.net	교육
18	채옥희	여	원광대 생활과학부	교수	010-6658-2798	chae@wonkwang.ac.kr	교육
19	홍달아기	여	원광대 생활과학부	교수	010-6797-7000	dalhong@wku.ac.kr	교육
20	송 순	여	원광대 생활과학부	교수	010-4650-8356	ss6653@wku.ac.kr	교육
21	김흥주	남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교수	011- 752-9426	kanddol@wku.ac.kr	복지
22	은혁기	남	전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010-4662-0109	eunhgi@jnue.ac.kr	-

연번	성명	성별	소속기관 및 직위	직위	핸드폰	이메일	희망 분과
23	천호성	남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010-9856-0224	cheon422@jnue.ac.kr	-
24	조경욱	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010-2622-2924	wook7231@jd.re.kr	사회
25	서은영	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010-6411-0269	jara5050@naver.com	복지
26	허명숙	여	전북발전연구원	소장	010-9476-1000	hur2727@hanmail.net	교육
27	이동기	남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011- 674-3060	base@jd.re.kr	문화
28	전준형	남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010-5535-2345	yulsa@hanmail.net	교육
29	이지훈	남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1-836-0598	ingan21@hanmail.net	사회
30	김희숙	여	군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3680-1307	khsuk61@hanmail.net	교육
31	고재영	남	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1-9445-3844	kose1000@hanmail.net	사회
32	이정주	남	김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2937-1125	dlrjs69@hanmail.net	문화
33	박경희	여	정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1-9022-1051	pkh58610@hanmail.net	문화
34	한규성	남	진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8830-9131	kusnghan@hanmail.net	복지
35	류명원	남	무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3166-6507	ymwkwk@hanmail.net	복지
36	이현선	여	장수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2650-3362	emadang@hanmail.net	교육
37	이순옥	여	임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9877-8215	lso5712@hanmail.net	복지
38	이희자	여	순창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4645-0282	kid2750@hanmail.net	교육
39	강연화	여	고창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7116-8059	river8059@hanmail.net	교육
40	김진배	남	부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010-5682-5410	kimjb1019@hanmail.net	문화
41	하태현	남	우석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010-5050-5729	thiha@yahoo.co.kr	문화
42	박경순	남	우석대 실버복지학과	교수	010-6822-2672	kspark@woosuk.ac.kr	사회
43	하승민	여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011-679-8906	seungmin@wooksuk.ac.kr	복지
44	정영인	남	우석대 한국어학과	교수	010-8924-1317	younginc@wooksuk.ac.kr	복지
45	함한희	여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010-9588-3285	hanheeh@jeonbuk.ac.kr	-
46	권순희	여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281-7132	shkwon@jnue.ac.kr	-
47	조무현	남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010-2616-2462	world-cho@hanmail.net	사회